

평화와 통일

Peace and unification

평화와 통일

창간준비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창간 준비호를 내며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저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저널이 2022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를 이번 창간 ‘준비호’를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은 2020년 12월에 국립통일교육원 내에 설립된 ‘평화통일교육연구센터’가 주가 되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널은 2022년부터 매년 1년에 두 차례, 상반기(5월 하순)와 하반기(11월 하순)에 발행될 것입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은 국민 모두가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사회와 마음의 통합,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들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상상력, 새로운 이해 프레임들, 다양하고 소중한 성찰들과 담론들이 교차되면서 화해되고 확산되면서 융합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이 저널은 일종의 ‘플랫폼’(platform)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플랫폼이 그러하듯이 이 저널 [평화와 통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이 곳에 당도하고 또 이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고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간호를 곧바로 내지 않고 창간 ‘준비호’를 우선 발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창간호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될 다양한

콘텐츠들과 내용들을 준비 기획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저널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혹은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원하시게 될, 이를테면 콘텐츠라든가 소통의 형식과 방식이라든가 등을 사전적으로 알아내어 이해하고 그것을 창간호부터 구현해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저널 [평화와 통일]을 발간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의 발행 그 자체는 국립통일교육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국민과 함께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널 [평화와 통일]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선형적으로 이미 구성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가적’ 공간에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저널 [평화와 통일] 공간을 ‘통해’ 구성되고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재)구성 과정은 다시금 새로운 정책과 담론과 내러티브 등의 생산을 자극하고 이것이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을 자극하는, 이른바 창조적 순환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창간 준비호에서는 여러 쪽지의 화두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시기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롤리코스트의 움직임을 보이는 한반도와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정책의 현실과 전망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정세 속에서

‘중전선언’이라는 의제는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갖는지도 ‘이슈’라는 코너를 통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일교육입니다. 현시기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점검해 보아야 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교육이 걸어 온 길과 그리고 걸어 가야할 길을 성찰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화두들은 창간호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입니다.

창간호부터 [평화와 통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코너와 내용들을 갖춘 저널로서 발행될 것입니다. 이념과 입장의 차이를 벗어나 다양한 담론과 내러티브들이 저널 [평화와 통일]에 소개되고 저널 공간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종의 ‘특집’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과 지혜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적 연구들도 소개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을 논문 형식을 통해 소개하는 코너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롭고 다채로운 문제의식을 지닌 수 편의 학술 논문들이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게재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지식인들의 가치 있는 성찰과 지혜를 소개하는 지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북) 아시아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지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목소리들을 국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널 [평화와 통일]은 ‘현재’ 거론되

어 회자되는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소개해 정리하는 코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고민들이 응축되어 표현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일종의 리뷰(Review) 코너도 기획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널 [평화와 통일]은 창간호부터 여러모로 소통과 연결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널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사회의 통합 그리고 최종 심급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국립통일교육원의 종합적인 저널로서,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담론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연결하고 공존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그 시작을 기획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목차

창간 준비호를 내며 · 편집위원회	2
--------------------	---

특집기획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 김연철	11
글로벌 미·중 경쟁의 향방과 한반도 · 조민	25

평화·통일교육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조정아	53
남북한 출신이 이웃으로 함께 살기 · 이향규	75
평화·통일교육의 갱신을 위한 다섯가지 테제 · 이동기	93

이슈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 이정철	121
------------------	-----

리뷰

평화와 통일의 현장은 우리 곁에 있다 · 홍석률	133
독일 한인이주여성, 그녀들에게 열정을 배우다! · 박인옥	141

특집기획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 김연철

글로벌 미·중 경쟁의 향방과 한반도 · 조민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I. 남북관계와 장기적인 보건위기

남북관계는 2018년 세 번의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서, 장기교착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 재개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는 줄어들고, 불신이 늘었다. 교착이 길어질수록 협상 재개의 조건도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악화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군비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북핵 해결의 환경과 충돌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보건 위기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2020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차단과 봉쇄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외부로 향하는 항공, 철도, 해운을 중단했다. 물류의 경우도 대련~남포의 항구만 열고, 제한적이고 엄격한 통관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장기적인 보건 위기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상황을 고려, 외화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관광 개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기적인 보건 위기와 대외접촉의 차단은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관광을 중단시켰다.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원산·갈마 지구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의 건설도 잠정 중단했다.

엄격한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재 국면에서도 열려 있던 비공식 무역도 중단되었다. 19세기 이후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공식과 비공식 무역이 동시에 중단된 시기는 거의 없다. 어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경우에도 장기격리 정책을 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차단과 봉쇄는 교류와 접촉의 중단을 의미하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보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차단과 봉쇄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다. 백신 도입을 위해서는 '부작용 면책'을 비롯한 법적 계약의 내용을 협의해야 하고, 백신의 보관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도 중요하다.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성공하고, 이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하고,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제약이 작동하고 있다.

II.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남북관계

미중 전략 경쟁 시대는 남북관계의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 정세의 영향을 받았지만, 미중 협력 시대에서 미중 경쟁시대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구조적인 교착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남북관계 교착의 구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남북관계의 장기교착이 시작되었다. 교착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미·중 협력이 필요한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동북아 지역 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전쟁 이후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와 북중소 북방 삼각체제의 대결 시기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웠다. 1970년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하고 닉슨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시기에, 남북한은 7.4 남북공동 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핵 문제가 시작한 이후에는 북핵 협상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는 휴전협상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4자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 즉 4자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중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0년대 6자회담은 미중 협력의 무대였고, 9.19 공동선언은 미중협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미중협력의 시대는 끝나고, 미중 대결의 시대가 본격화했다.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북·중의 전략적 밀착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최소한 군사 분야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벗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에 편승했다.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결합하면서, 북한은 남북미 삼각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그 결과는 북미 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의 악화였다.

둘째, 제재 때문에 남북관계의 공간이 협소하다. 제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양자 제재 형식으로 장기간 지속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비례해서 제재결의안의 내용도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서두르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포괄적인 북한 경제력의 약화로 전환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했고, 외화를 벌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도 전원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에 대한 투자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경제협력 자체가 어려워졌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관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유엔 차원의 제재는 남북 교류협력의 공간을 축소했다. 남북관계의 구조적 제약은 남한의 중재 능력을 약화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협상을 중재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제재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남북관계의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커졌다. 더 높고 더 신속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대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그리고 2018년의 봄이 2019년의 교착으로 전환하면서 불신이 깊어졌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는 어렵다.

불신이 깊어진 만큼 협상재개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바이든 정부는 정

상회담보다 실무회담을 선호한다.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실무회담의 성사도 어렵지만, 실무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쟁점을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억지를 위해 한미일 삼각체제의 강화를 근간으로 동북 아시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한미 양자 협의보다, 한미일 삼자협의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약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북핵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대중국 억지를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 협상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중 협력을 분리하고, ②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여 남한의 중재적 역할을 강화하며, ③ 신뢰를 구축하면서 속도를 높여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① 미·중 전략경쟁은 격화되고 분야가 넓어지고,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다. ② 남북관계의 불신이 높아지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다. ③ 불신이 늘어나 실무적 협의가 더욱 어려워졌다.¹

2. 남북관계의 미래: 비핵화, 평화체제, 경제공동체의 병행

비핵화, 평화 체제, 경제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상응조치이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 제재가 완화되어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물론 비핵화,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는 병행 발전하고, 동시에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결과이면서 과정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비핵화 없이, 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에서 북핵 문제를 무시

1 김연철, 「북핵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 『동아시아 재단 정책논쟁』 제167호(2021.10.12.) 참조.

하고, 다른 의제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제재는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유엔안
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
다.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을 진전해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핵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평화
체제의 진전은 어렵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비경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비경쟁과 평화체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 합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한미 양국의 제주 선언
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6번의 4자회담 본회담도
중요한 경험이다. 종전선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잠정조치이고, 비핵화 협
상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이며, 한반도에서 전후체제를 시작하는 출발이다. 그
러나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종전선언
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휴전체제의 변경에 소극적이
다. 나아가 군사 분야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휴전 관리의 주체인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북한은 실효적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인 종전선언에는 소극적이다.
결국 북미 협상의 교착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하기는 어렵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이후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길어지면서,
협상의 동력이 악화되고 있다.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된다. 교
착 국면이 길어지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하고, 불신이 깊어지고, 관계는

악화된다. 북핵 문제를 방지한 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북핵 협상의 장기교착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언제나 현상 악화로 이어졌고, 미중 전략 경쟁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무대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Ⅲ. 과정으로서의 통일

통일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1민족 1국가 1체제를 통일이라고 규정하는 전통적 시각도 있지만, 공존과 평화의 제도화를 사실상의 통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이며, 북한도 점차적으로 단계적 통일방안으로 전환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세대 차이도 크다. 1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3세대와 같을 수 없다. 1세대는 분단이 직접 체험이라면, 3세대는 간접체험이다. 1세대는 분단의 극복과 재통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3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한다. 3세대는 통일의 이익보다는 통일의 부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안한 미래보다 현재의 안정을 선호한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세대가 다양해지고,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졌다.

통일 편익과 통일 부담에 대한 인식의 격차도 크다. 전통적인 통일논의는 대체로 통일의 편익을 강조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국토의 면적이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이 넓어지며, 외교적 위상이 달라진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통일 부담을 강조하는 의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과도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1. 분단국 통일 사례의 시사점

통일을 ‘유토피아’ 혹은 ‘우울한 디스토피아’²로 보는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분단국 통일 사례의 시사점을 찾을 때에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분단의 과정이 다르고, 적대나 대립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흡수통일의 사례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결과이지 의도가 아니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0년 10월 서독과 동독이 통일조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1년이 물론 중요하다. 그 시기는 통일논의의 백화제방 시기였고, 통일을 향한 정치의 역동이 벌어진 시기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독이 민주적 선거로 통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동독 주민 다수가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전의 교류와 접촉과정에서 형성된 서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1989년 11월 이후를 중시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이전의 오랜 세월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교류와 접촉이 상호 이해로 이어지고, 그것이 통일의 문을 열었다.

서독과 동독은 1970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정부는 ‘털신을 신은 작은 발걸음 정책’, 즉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부터 꾸준하게 접촉을 지속했다.

교류와 접촉의 과정에서 사건이나 사고도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동서독

2 가장 대표적으로는 장강명의 소설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 있다.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서울: 예담, 2016).

은 대결의 감정을 동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성의 연합'을 유지했다. 접촉을 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진다. 접촉의 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찾는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하고, 상대방의 방송을 보고, 전화하고 소포를 주고받았다.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통일의 문으로 인도했다. 물론 통일 직후 혼란은 적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오류를 수정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이 발휘되면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분단국 통일 사례는 독일만이 아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분단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통일을 서두를 경우, 통일 이후가 통일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예멘의 경우가 그렇다. 1990년 북예멘과 남예멘은 통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통일을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통일의 배경은 권력 나누기였다.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면서, 남북 예멘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기계적으로 나누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증오를 해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통일에 합의했다.

결국 통일 이후 이루어진 선거에서 새로운 이슬람 정당이 등장하면서, 권력 나누기가 틀어졌고, 틈새가 벌어졌다. 1994년 그동안 잠재해 있던 갈등이 폭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북예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쟁 통일을 이루었다. 모든 권력을 북부인들이 장악했고, 남부에 대한 북부의 식민주의적 통치가 시작되었다. 북부의 강압적인 통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남부의 분리 운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민주적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전으로 번졌다. 오랜 내전은 국가를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공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실패'의 현재로 이어졌다. 예멘은 통일을 서두르다가 망했다.

2. 과정으로서의 통일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통일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든 통일이 선은 아니다. 통일이 더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다.

물론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코리아’로 나아간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분단을 부정한다고 해서, 분단의 현실이 사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같은 ‘평화로운 이혼’은 원래 다른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전제한다. 유고연방의 분열이나 수단에서 북수단의 독립도 원래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달랐다.

분단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목표는 분단극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이 없는 결과로서의 통일은 현실을 왜곡하고,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과정이 충실하면 결과는 따라오고,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결과로서의 통일만 상상하는 것은 ‘모래 위의 성’이나 마찬가지다.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를 빼고 통일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한국전쟁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도 비무장 지대의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병사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남긴 폭력과 증오도 분단을 재생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분단극복은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의 정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분단의 세월이 흐를수록 남북관계에서도 같음보다 다름이 커졌다. 정치와

경제의 이질성이 커졌고, 일상과 문화적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상호인식도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적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통일 비용이란 통일 시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이다.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분단극복 노력이다. 대화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촉과 소통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으로 같음을 늘리고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통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둑처럼 오는 통일’은 재앙이며, ‘농부의 마음’으로 통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만큼, 결실이 풍성할 것이다.

3. 공존의 지혜

통일은 과정이고, 동시에 공존을 의미한다, 공존의 공감이가 결국 통일과정의 평화를 의미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내부의 관계에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에서도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차이의 인정이다. 인간은 다양하고 세상은 복잡하다. 통일이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태다. 그래서 통일은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나의 악기로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없다. 각자 다른 음을 가진 악기들이 모여 화음을 이룬다. 그래서 통일은 조화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통일의 기본이고, 그래야 통일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다.

둘째는 화해의 중요성이다. 화해는 적에서 친구로 대결에서 신뢰로 전환하는 문이다. 일반적으로 화해는 한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움직인다. 사람 관계든 남북관계든 존재하는

한 갈등은 만들어진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통일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화해는 평화보다 어렵고 통일보다 복잡하다. 화해는 통일의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셋째는 호혜의 중요함이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때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 일방적 지원은 한계가 있고,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남북한의 산업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호혜적인 분업이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같이 공동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적지 않다. 관계가 약화해서 사람의 교류는 끊어져도 동물과 식물의 이동은 연결되어 있고, 산불이나 홍수, 각종 전염병도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존의 제도적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제다. 남북연합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고,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다. 물론 북한은 연방제의 단계를 낮추어서 현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공감대는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김정은 체제의 국가주의 강조와 남북 양측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결국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 차이를 고려하면, 남북연합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남북연합은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분야별 공동위원회 상설화부터 시작해서, 협의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세부화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남북연합의 제도적 형태도 구체화할 것이다. 법적 통일은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IV. 합의와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의 이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출발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합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오래된 숙제다.

우리는 그동안 합의를 강조해 왔다. 국회에도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제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초당적 협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강대국에 의한 분단을 국내적인 연합정치로 극복한 오스트리아의 사례나,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동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서독의 초당적 협력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려는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공통점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인내가 통일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 미래세대가 스스로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서로 토론하면서 답을 만드는 참여형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

학습만큼이나 체험도 중요하다. 다양한 통일사례를 체험하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접경지역을 둘러보면서 분단을 체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더 붙여 사는 지혜라고 이해한다면, 통일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화해하고, 더붙여 살아가는 통일의 지혜를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서 통일을 시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 서울: 예담, 2016.

김연철, 「북핵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 『동아시아 재단 정책논쟁』 제167호, 2021.

글로벌 미·중 경쟁의 향방과 한반도

●
조 민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 선문대 초빙교수

I. ‘팍스 아메리카’에서 ‘팍스 시니카’로 가는가?

미국이 창출하고 유지해온 세계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기반을 두고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두 축을 세웠다. 한 축은 세계경제 측면에서 ‘브래튼우즈 체제’인 자유무역체제, 다른 한 축은 세계 안보전략 차원에서 유엔(U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이었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체제의 다른 한 진영을 이끌어왔던 소련의 현실사회주의체제가 마침내 붕괴한 후, 미국의 승리는 분명해 보였다. 그 후 미국은 20여 년 가까이 어느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과시하면서 유일(唯一)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향유했다. 그러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위상이 추락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1세기로 들어서자마자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미국의 심장부 뉴욕의 쌍둥이빌딩 무역센터를 공격했다. 이로써 미국식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찾을 수 없다고 ‘역사의 종언’을 외치면서 높이 들었던 축배의 잔은 한 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분노와 흥분 속에 미국은 곧장 대테러 전쟁을 일으켰다. 대테러전쟁은 중동 지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지만 미국도 함께 깊이 병들어갔다. 20년간의 중동 개입으로 미국은 수렁에 빠졌고, 결국 엄청난 국력 소모와 함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미국의 중동 개입의 결산인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초라한 위상만을 각인시켰다.

미국이 중동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이 급부상했다. 2008년 9월 미국 뉴욕 월가 발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휘청거렸고 얼마 후 2010년 중국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이때부터 중국 14억은 엄청난 자신감에 도취되어 흥분했고 중국 엘리트들은 ‘다음 차례는 미국’이라고 공공연히 외치면서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앵클 샵’의 면상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미국은 비틀거렸고 중국은 기고만장했다. 그러자 미국 내 학계, 언론, 월가의 투자은행은 앞 다투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 전망들을 쏟아내면서 마치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해’로 여겼다. 이에 미·중 세력전이(power shift)로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시대가 가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가 온다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회의와 함께 쇠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에게 엄청난 국력 소모를 가져왔으며,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일취월장의 절호의 기회였다.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 승승장구하는 경제력으로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II. 중국 : 세계패권 대장정

1. 중국의 패권전략 : 부흥과 ‘마라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 두 명의 임금이 있을 수 없다”(孔子曰：『天無二日，民無二王』, 《孟子 萬章(上)》). 이는 중국인의 영원한 스승 공자의 언명이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다!’ 공자의 언명은 중국인에게는 세계 질서는 계층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그 정점에는 언제나 한 명의 통치자가 있을 뿐이라는 천하관(天下觀)으로 각인되었다. 마오쩌둥은 대장정 시기나 문화대혁명기에 품고 다니면서 17번이나 읽었다는 치국서 『자치통감』(資治通鑑)과 함께 이 격언을 권력정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또한 마오쩌둥은 종종 미국을 물리치는 것이 인류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라고 강조했다.

20세기 중후반 서구의 지식인들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시대 서양의 무력과 오만으로 중국이 당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중국을 형상화했다. 그들은 중국 고대 문명을 예찬하면서 퇴락한 서구 문명의 막연한 대안적 이미지를 찾고자 했다. 그러한 분위기는 미국 주류 학자들로 하여금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대중 인식과 함께 미국을 표류하게 만들었다.¹ 이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여겼고 특히, 중국의 세

¹ H. 키신저는 대표적인 중국 포용론자이자 친중파의 원조이다. 그는 평생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놓았다는 자부심에 살아왔지만 중국의 야심과 와신상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Kissinger, Henry A. 저, 권기대 역,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2)). G. 그레이엄 엘리스는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부딪칠 경우 전쟁으로 치달기 쉬운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했다. 그는 신흥 세력인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한 패권국 미국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엘리스는 중국의 급부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워싱턴의 지나친 우려 자체가 오히려 미·중 갈등을 부추긴다는 아주 ‘괴이한’ 논리를 전개했다(Allison, Graham,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5, 2015); Allison, Graham 저,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예정된 전쟁』은 중국 문명을 예찬했던 키신저보다 한 술 더 떠서 아예 ‘시진핑의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시진핑을 그야말로 예정된 불세출의 지도자로 치켜세

계 전략과 야심에 대한 긴장을 놓쳤다.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국이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믿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상적 무장해제'를 초래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이미 패배하고 있었다. 패배는 사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이처럼 서구인이 아무리 중국사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문명의 성격과 중국 권력정치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산하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M. 필스버리는 미·중 대결의 본질을 파헤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필스버리는 『백년의 마라톤』을 통해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의 세계 패권 대장정을 분석하였다.² 그는 마오쩌둥 시대부터 이미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린 중국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필스버리는 '중국몽(中國夢)'으로부터 얘기를 풀어간다. 『중국몽』은 2009년 인민해방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방대학교 교수 류밍푸(劉明福)가 쓴 책이다. 이 책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주도국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밝혀놓았다. 그는 왜 소련이 미국을 추월하는 데 실패했는가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꿈'은 중국의 부흥이며, 21세기 중국의 위대한 목표는 세계 최강국이 되는 데 있다. 류밍푸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결투나 복싱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라톤이 끝나면 중국이 마침내 지구상에서 최강국으로 군림한다고 설파했다. 부흥과 마라톤이 전략적 키워드이다. 류밍푸는 1949년을 출발점으로 중국 공산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마침내 백년 마라톤의

운다. 마치 시진핑에 바치는 한 편의 헌사(獻辭)처럼 보인다.

2 Pillsbury, Michael 저, 한정은 역, 『백년의 마라톤』(서울: 영림카디널, 2016), 16~29쪽.

테이프를 끊으면서 찬란한 중국 부흥의 날이 개막된다는 드라마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패권전략 드라마와 달리,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미·중 관계개선 이래 50년 동안 대중 '건설적 포용' 기조를 유지해왔다. 중국이 장차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세력이 될 것으로 믿어온 미국의 대중포용정책은 반세기 동안 아무런 회의 없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완벽히 잘못된 가설이었다. 필스버리는 『백년의 마라톤』 서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자신도 중국의 발전을 돕는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가설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만큼 미국이 위협해졌다고 고백한다.

중국은 바로 미국 목전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도록 지금까지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계은행(WB)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중국 생산품의 최대의 소비국이었으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없이는 불가능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에게 민감한 정보, 기술, 군사, 첩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미국이 중국에게 주지 않은 것들은 중국이 훔쳐갔다. 중국은 세계를 향해 그들의 '평화로운 부상'(peaceful rising)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고 베이징을 세계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중화질서 아래 세계 최강대국이 될 때까지 술한 제후국들이 치고받았던 전국시대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다. 세계 패권을 향한 중국의 대장정에서 미국은 추월당하고 있다. 미국은 추락하고 말 것인가? 50여 년 동안 미·중 관계의 현장에서 중국의 대미 전략 사고를 파헤친 필스버리는 이렇게 술회한다.

“미국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베이징은 탁월하게 전략적 변신을 해왔다. 워싱턴의 유력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견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능숙하게

대처했다. 미국과의 세(勢)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국 지도부는 전국시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적진에 들어가 있는 간자(間者). … 이에 반해 미국에게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³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知彼知己 百戰不殆). 이는 중국의 국가 경영자와 전략가의 필독서인 『손자』 제3편 「모공(謀攻)」의 절구이다. 필스버리는 사실 『손자』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적 전략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본질이 기만술(兵不厭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과 함께 처음부터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출발했다. 중국은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면서 2049년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백년의 마라톤’을 역주(力走)하는 중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친구’로 여기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추구해왔다. 바로 여기에 미·중 간 상대 인식에 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중국은 미국을 끊임없이 속여 왔고, 중국의 ‘백년의 마라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 시진핑의 중국

중국은 2개의 100주년을 국가목표 달성의 해로 선언해왔다. 먼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다음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목표를 내세웠다. 2050년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하는 해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의 강한 압박과 포위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연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당이 군과

3 위의 책, 81쪽.

정부를 모두 통제하는 당국가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승계하였고, 2013년 3월 14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에 선출되었다. 2018년 3월 1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통치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세 축인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최고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최고의 통치권과 모든 대내외 정책 결정권이 시진핑 1인에게 집중되는 체제라는 점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의 최고통치권과 당·군·정의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면 다음 단계는 정해진 코스를 밟게 된다. 이는 장기(영구)집권체제의 구축과 함께 전 사회적 차원에서 최고통치자의 우상화 작업이 추진되는 코스를 예상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과 함께 국가목표로 제시된 ‘중국몽’은 한 단계 더 진전된 ‘강한 중국의 꿈’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시 주석은 경제적 급성장세를 타고 한껏 자만심에 부푼 현재의 중국 인민의 자부심과 과거에 치욕을 안긴 구미(歐美)세력에 대한 설욕 의지를 하나로 묶었다.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깊이 연구하고, 미국에 맞설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미국이 자만하고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중국은 미국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와서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대학, 군사, 정보기관, 국제기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약점을 간파하면서 심장부로 파고 들었다.

도광양희(韜光養晦)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말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한 28자 방침에서 유래한다.⁴ 이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켜 힘을 기르면서 전술적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외교 전

4 덩샤오핑 28자 방침: 냉정관찰(冷靜觀察)·온주진각(穩住陣腳)·침착응부(沈著應付)·도광양희(韜光養晦)·선우장졸(善於藏拙)·결부당두(決不當頭)·유소작위(有所作爲)

략이다. 그 후 중국의 외교노선은 도광양회에서 경제대국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부심 속에서 마침내 대외관계에서 덩샤오핑의 28자 방침의 마지막 방침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나타났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대에는 중국이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가 부각되었다. 사실상 대국굴기(大國崛起)라고 할 수 있는 화평굴기는 한 동안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으로 운위되기도 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시진핑 집권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를 보였다. 시진핑은 2012년 12월 공산당 정치국 제3차 전체 학습에서 “중국 외교가 세계 규칙의 추종자에서 제정자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초 중국 외교부 주간지 <세계지식(世界知識)>은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를 표방했다. 시진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2013년부터는 ‘도광양회’를 팽개치고 중국이 세계규칙 추종자에서 제정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⁵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Xi Jinping’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the New Age)을 언급하며 자신의 독창적 사상체계로 내세웠다. 시진핑은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결승, 나아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신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선언했다.⁶ 그리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의 지도사

5 「主動作爲… 중국 세계전략의 전환」 『조선일보』, 2013년 12월 2일.

6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동지침—19차 당 대회로부터 보는 시진핑 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신화망』(온라인), 2017년 10월 21일, <http://kr.xinhuanet.com/2017-10/21/c_136693812.htm>.

상이자 곧 '시진핑 사상'으로 부각되면서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터놓았다.

한편 시 주석이 경제 정책으로 내건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주목을 끌었다. '공동부유'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성장에서 분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은 4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안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엄청난 빈부격차를 낳았다. 이에 시대적 역할을 다한 덩샤오핑의 '일부 사람들은 먼저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을 물리치고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분배 정책으로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그리고 대외경제와 함께 서부지역 발전과 내수경제 중심 정책인 '쌍순환(雙巡還) 전략'을 경제발전 전략으로 삼았다. '쌍순환(雙巡還) 전략'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된 대외 수출 부문의 한계를 반영한 정책이기도 하다.

공동부유는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책이지만 당과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시장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분배와 불평등 극복의 공동부유 정책은 자칫 '공동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진핑은 제20차 당 대회와 장기집권 전략에 '올인'하고 있지만 그의 이념 중시와 분배 정책 등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인가? 중국은 2021년 11월 공산당 100년 역사상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오쩌둥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는 시 주석의 이념적 기반과 함께 그가 지향하는 중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역사결의에서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며, 실제로 증명된 중국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올바른 이론 원리와 경험 요약"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영혼은 각 구성요소를 관통

하는 관점, 방법이며 사실로부터의 진리 추구, 대중 노선, 독립의 세 기본 측면으로 구현되어 당과 당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도를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⁷ 시진핑은 이처럼 마오쩌둥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과거와 미래의 이정표로 내세웠다. 시진핑 시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구현한 마오쩌둥 사상의 데자뷔(déjàvu)가 될 것이다. 중공당 중앙위원회 역사결의는 시진핑 사상을 확립하고 그의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이벤트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선언했다.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현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본질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 당은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당중앙의 핵심이자 전당의 핵심적 지위로 세웠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에 시진핑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을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은 마르크스를 불러냈고 마오쩌둥 사상을 소환하면서, ‘시진핑 사상’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마이 웨이’를 선언했다.⁸ 시 주석은 이제 당 창시자 마오쩌둥과 중국을 일으킨 덩샤오핑과 동격인 지위로 부각되었다. 이번 결의는 덩샤오핑 때 시작해 장쩌민 등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권력 분점인 집단지도체제를 타파하고 마오쩌둥의 1인 지배체제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⁹

7 《新華通訊》, 2021.11.16.

8 「중국, “시진핑 사상으로 제 갈 길 갈 것”」 『한겨레』(온라인), 2021년 11월 12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19122.html>>.

9 “Xi Jinping Aims to Rein in Chinese Capitalism, How to Mao’s Socialist 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online), (September 20, 2021), <<https://www.wsj.com/articles/xi-jinping->

3. 중국이 가는 길, 탄탄대로(坦坦大路)일까?

1) 초(超)중화민족주의와 전랑외교

중국이 강력해짐에 따라 초중화민족주의가 드세어지고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무슬림과 티베트 소수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투옥, 인권 유린, 홍콩과의 '일국양제' 거부 등 배타적 중화민족주의가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소수민족 탄압을 정당화하면서 대항하는 세력을 모두 적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의 배타적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중화민족주의는 국내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철저히 잠재우면서 '중화의 자부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중국 인민을 환상에 빠뜨리고 국내적 단결을 노린다. 그와 함께 해외정책에서는 중국보다 작거나 약하다고 인식되는 나라에 대한 거침없는 주권 무시와 '전랑외교(戰狼 wolf warrior)'로 표출되었다. 늑대 외교, 늑대전사 외교는 21세기 중국의 외교관들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패권투쟁의 핵심이며, 또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영토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강성해지수록 중국에 대한 세계의 위구심이 그만큼 증대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러독스'(China Paradox)에 마주친다. '차이나 패러독스'는 중국의 초민족주의 신념(hyper-nationalist beliefs)인 중화주의의 발로이다.¹⁰ 중화주의는 '한-중심주의(Han-centrism)' 이데올로기로 '한(漢)이 아닌 것', 비(非)한적인 것은 저열한 것이며 모두 중화(中華)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가치

aims-to-rein-in-chinese-capitalism-hew-to-maos-socialist-vision-11632150725).

¹⁰ Thayer, Bradley A. and John M. Friend, Opinion Contributors, "The dark side of powerful China — its repression — can benefit US" *THE HILL*, (January 9, 2019).

관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생각이다. 그러나 세계는 중국인의 이런 사고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 ‘차이나 패러독스’는 한·중 관계처럼 중국과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는 현실을 지적하거나, 또는 중·호주 관계에서 보듯 중국이 호주에 대해 압박이나 보복을 하면 할수록 역으로 중국이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어쨌든 중화민족주의는 강대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를 넘어 중국에 대한 존경이나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는 국가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중화주의는 자기 우월적 신념에 도취되어 오히려 중국 스스로 세계 속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폐쇄적 세계관일 뿐이다. 중국이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경제, 정치, 군사 강대국이지만 아직까지 21세기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보편적 가치, 규범, 도덕 등 문명사회의 메시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 중국처럼 장구하고 거대한 제국이 인류사회에 대한 포용은커녕 위압적이고 폐쇄적 체제를 지향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에서 자주 확인된다.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을 겨냥하여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강한 생명력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지구전’(持久戰)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호소하였다.¹¹ 지구전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과 정면 승부에 맡겨들지 않고 장기 전략을 통한 투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절 마오쩌둥이 정립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절제된 언명이었다. 시 주석은 2021년 7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피의 위협과 협박’으로 중국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세력에 대해 소름

11 「시진핑 “어떤 국가도 중화민족 위대한 꿈 막지 못해”」 『경향신문』(온라인), 2020년 7월 31일,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7311422001#c2b>>.

돈는 으뜸장을 놓았다.¹²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5천년이라는 유구한 문명과 역사를 가지고 ...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의 초점은 대만 문제였다. 시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 실현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평화 통일 프로세스' 추진을 역설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신냉전 기류가 드세어지고 있다.¹³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방해하는 자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했다. 누가 이러한 폭언이 문명국가의 통치자의 발언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시 주석은 그만큼 초조해하고 있다.

2)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 '차이나 포비아'(China Phobia)

중국 공산당(CCP)이 이끌어가는 중국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크게 번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 공포증 즉, '차이나 포비아'이다.¹⁴ 중국은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첫 손 꼽는 비호감 국가로 부정적인 평가가 최고로 높아졌다. 중국 공산당의 행태와 이념이 인권, 자유, 법치, 민주주의 등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공포를 증폭시킨다. 미 정부 당국도 중

12 『시진핑 “중국 괴롭히면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깨져 피흘릴 것”』 『연합뉴스』(온라인), 2021년 7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66000704>>.

13 Brandw, Hall and Gaddis, John Lew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14 『[중공산당 100년] ② '중국붕괴론' 넘었지만 '차이나 포비아' 확산』 『연합뉴스』, 2021년 6월 20일.

국 공산당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미국인의 삶과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경계하고 나섰다.¹⁵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오래 동안의 환각 상태에서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한 공포감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이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건재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 고조,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시달리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중국 공산당은 아마도 이런 위기와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할 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부패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¹⁶ 차이 샤는 중국 엘리트 산실인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평생 고위 간부들을 교육해온 망명 교수로 공산당에 헌신한 자신의 일대기를 술회한 「실패한 당」이라는 글로 미국 조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¹⁷ 이 가운데 차이 샤의 시진핑에 대한 인상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시진핑이 기본 판단력을 결여했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 모른다(he lacks basic judgment and speaks illogically). 이런 그가 어떻게 중국의 미래를 향한 정치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에서의 그의 생각과 말은 모두 통제되고 협박을 받았으며 당에서 제명되고 결국 쫓겨나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서양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중국에 대해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중국은 세계를 중국 체제와 권력 강화의 대상으로만 삼았으며, 공산당의 냉전 사고방식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설파했다. 나아가 중국은 서양 가치

15 로버트 C.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연설(2020.06.24),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세계 야망”(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kr.usembassy.gov/062620-the-chinese-communist-partys-ideology-and-global-ambitions/>

16 Minxin Pei, “China's Coming Upheaval” *Foreign Affairs*, (April 3, 2020).

17 Cai Xia, “The Party That Failed – An Insider Breaks With Beijing”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21).

관이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지하고 막아왔다고 하면서 중국 체제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표로하기도 했다.¹⁸

시진핑 주석은 이미 세계와의 냉전을 시작했고, 냉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외강경 노선은 시 주석의 집권 전략과 통치 철학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의 '모노드라마' 통치 행태가 14억 중국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결말을 낳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의 미래는 시 주석 1인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는 중국의 근간을 덩샤오핑의 실용에서 마오쩌둥의 이념 중심으로 이동시켰다. 언론, 기업, 플랫폼 등 민간 부문의 전면적 통제로 폐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반(反)외국기업 정책으로 애국적 소비와 중국 기업 우선주의를 내걸었다. 그에 따라 탈(脫)중국화 추세는 한층 거세졌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의 구조화된 권력 부패 사슬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시 주석이 연출하는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고, 중국 공산당이 가는 길이 결코 탄탄대로일 수는 없을 것이다.

III. 미국의 대반격 : '바이든 독트린'과 대중(對中) 포위망

1. 돌아온 미국, 리더십 회복의 마지막 기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폭주하는 코로나 팬데믹, 엄청난 불평등과 사라진 중산층, 급증하는 부채, 골병 든 민주주의, 세계적 리더십의 하락 등의 내파 상태의 회복이 쉽지 않다고 여긴다. 여기에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도전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면, 미국의 위기 극복 가능성과 밝은 미래에

¹⁸ 존 서드워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극 혹은 위협」 『BBC News/코리아』, 2021년 7월 3일.

대한 긍정적 전망도 주목된다. 즉, 미국의 쇠퇴라는 속명론은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젊은 인구, 재정적 우위, 풍부한 자원, 평화로운 국경, 강력한 동맹 및 혁신적인 경제와 같은 부러워할 만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나라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스스로 교정할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민주주의의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얘기한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4년이 미·중 간 패권경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바이든은 이미 대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을 갱신하고 미국의 경제 미래를 보호하면서 다시 한 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바이든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 - 트럼프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 구출」)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침이 되었다. 바이든은 미국의 강점으로 청정에너지·양자 컴퓨팅·인공지능·5G 통신·최고 수준의 암(癌) 치료 등에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엄청난 혁신기들의 존재를 내세웠다.¹⁹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대미 도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 관리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자 미국의 퇴조는 불가역적이라고들 한다. 지금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대외전략을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미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국제주의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다.²⁰

19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20 조민, "돌아온 미국: 국제주의와 리더십 회복", 〈폴리뉴스〉, 2021.01.25.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2936>.

2. 바이든 독트린 : ‘민주주의 vs 독재국가’의 판가름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바이든 독트린’(Biden Doctrine)으로 부른다.²¹ 그는 미·중 패권경쟁은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와의 싸움’이며, 지금이 민주적 지배와 독재적 집권을 가늠하는 변곡점이라고 주장한다. 베이징이 5G 통신이나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중국이 독재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민주적 경쟁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 강화와 함께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대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독트린은 트럼프의 무역 조건 수준의 대중 억제를 넘어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바이든 독트린’의 실천 전략의 키워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독재국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국내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통한 민주적 연대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와 함께 초국가적 문제 즉, 글로벌 팬데믹이나 기후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가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패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태로워졌다는 위기의식에 뿌리를 두고 ‘인권, 자유, 법치, 민주주의’를 독재국가에 대응하는 전략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의 외교 및 무역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연합 전선 구축을 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속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와 군사안보의 통합 속에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대중봉쇄를 강력

²¹ Hal Brands, “The Emerging Biden Doctrine: Democracy, Autocracy, and the Defining Clash of Our Time,” *Foreign Affairs*, June 29, 2021.

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5대 핵심기술(AI, 양자컴퓨터, 생체공학, 반도체, 자율주행시스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세계의 공장' 중국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쟁은 바라지 않지만, 그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득권을 리셋(reset)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인 리쇼어링(Reshoring)과 더불어 중국 내 외국기업의 탈(脫)중국화를 유도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EU와 연대의 손을 잡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특히, 세계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비시장경제체제를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 포 위망은 두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질서 위협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인권, 법치 및 항행의 자유 지지에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 인프라, 노동 표준 등 공동 목표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추진을 강조하였다."²²

다음으로 군사안보 차원의 반중(反中) 포위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쿼드(QUAD)가 떠오르고 있다. 오커스는 안보 분야, 쿼드는 글로벌 경제 분야를 담당하며 모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연대로 반중 포위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쿼드는 지역평화·안정·안보·번영을 내세우는 한편,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전략이다.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Quad+)' 구상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아시아판 나토(NATO)'가 출범하

²² "바이든, 중국 겨냥해 '규칙 기초한 국제질서 위협 우려'", 「연합뉴스」, 2021년 10월 28일

는 셈이 된다. 미국이 냉전 시기 ‘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대립구도에 ‘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전 방위적 대중 압박에 전략적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New Strategic Concept 2022」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위협을 핵심 안보 우려로 부각시켜 미국과 보조를 맞추었다. 미국과 나토의 연대가 대륙세력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평화적 공존과 ‘원윈’은 불가능한 일일까?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 존 J. 미어샤이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했다.²³ 그는 미·중 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경쟁을 신중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워싱턴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무력 충돌이 기껏해야 무익한 승리만을 가져올 뿐, 누구도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베이징을 설득하면 최소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패권경쟁이 평화적 형태로 승부가 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내정치가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개혁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의 국내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국은 법치 부재, 강력한 당 통제 국가로 회귀하면서 ‘닫힌 체제’로 치닫고 있다. 경제 활력의 회복이 시급하지만 국내외 도전 증가, 세계적 코로나 확산,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회복 전망이 무척 어둡다. 이에 H. 브랜드와 M. 베클리는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며,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들은 외교저널 〈포린폴리시〉에

23 John J. Mearsheimer,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발전 궤적에서 정점을 찍었으며(peaking), 곧 수그러들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 위치도 잘못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라이벌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⁴ 저자들은 패권국과 신흥강국 간의 전쟁 가능성을 환기시킨 주장을 전면 거부했고, 중국이 강력하게 상승세를 타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대내외적 위기감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기에 미국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부상하는 중국이 아니라, 쇠퇴하는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외면할 수 없다. 다니엘 H. 로젠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진핑에게는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중국이 어느 정도 버텨낼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 당장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²⁵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공산당의 움직임은 경제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및 기술 개혁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치 캠페인으로 현실을 호도(糊塗)해왔다. 시장개혁 거부가 큰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시장’ 솔루션의 약속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와 이념이 국가경제를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경계와 우

²⁴ Brands, Hal and Beckley, Michael, “China Is a Declining Power—and That’s the Problem(The United States needs to prepare for a major war, not because its rival is rising but because of the opposite)” *Foreign Policy*(online), (September 24,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9/24/china-great-power-united-states/>>.

²⁵ Rosen, Daniel H., “Xi Is Running Out of Time: China’s Economy Heads for a Hard Landing” *Foreign Affairs*, (November 5, 2021).

려가 매우 크다. 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휘청거리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강력한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날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이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미국과 중국의 미래를 향한 경쟁의 진정한 승부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달려 있다. 과학적 기술 혁신은 국제 전략 게임의 주요 전장이 되었으며 과학 기술의 높이를 둘러싼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다. 기술 경쟁은 인재 경쟁이다. 인재 즉, '인적 자원'(Human Capital) 측면에서 미국은 상대적 우위를 보여 준다. 중국의 가장 명백한 이점은 순전히 인구 규모이나, 이미 인구 통계학적 침체로 접어들었다. 반면 미국은 역동적인 이민자 사회이다. 구글, 인텔, AT&T, 화이자, 테슬라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이민자들에 의해 출범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 미만이지만 세계 부의 30%와 세계 혁신의 35%를 통제하고 있으며, 엄청난 개방성으로 전 세계 최고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다. 게다가 대학, 연구기관, 법률 시스템, 창의적인 기업 등 '혁신생태계'가 살아 있다. 여기에 미국 학계는 워싱턴이 혁신을 이끌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과 도전에 충격 받았고, 미국 조야를 넘어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초조감마저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분노를 넘어, 바이든 대통령은 결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벌써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세계의 미래를 장악하고 있다고 여긴다.²⁷ 이 지점에서 양국의 차이가 드러난다. 어쨌든 중국은 백년을 내다보고

26 Hass, Ryan and Armacost, Michael H., "The U.S. Is Still Beating China in Human Capital—For Now" *Foreign Policy*(online), (November 4,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1/04/china-human-capital-stem-graduates-competition/>>.

27 Sher, Nathaniel and Bresnick, Sa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ill Thinks It Owns the Future" *Foreign Policy*(online), (November 21,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1/21/>>.

뛰어왔다. 지난 1949년 건국을 기점으로 출발해 2049년에 100년의 마라톤을 끝내는 그날을 향해, 중국이 갈망하는 세기의 부흥을 향해 질주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앞지르고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목표로 설정한 해가 바로 2049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의 미국이 시진핑이 이끌어가는 중국의 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역사의 신(神)'은 과연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IV. 한국의 길,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

우리와 중국은 19세기 후반 근대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함께 좌절을 겪었다.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중국(청)은 서양 열강과 일본으로부터 침탈과 모욕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 모두 근대개혁의 실패로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휘둘렸고, 일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엄청난 수모를 겪었다. 우리와 중국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이웃인 셈이다. 전범국가 일본은 역사적 죄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경제대국으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해왔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참다운 이웃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역사 인식 속에서 동지적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 근대개혁이 청(중국)의 간섭과 종주권(宗主權, Suzerainty) 행사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임오군란(1882년)에서 청일전쟁(1894년)까지 조선은 중국의 만행으로 일제 식민지 상태보다 못하지 않은 침탈과 수모를 겪었다. 중국의 개입과 간섭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근대개혁을 성취하면서 국권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

the-chinese-communist-party-still-thinks-it-owns-the-future/).

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인식은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오쩌둥, 장제스, 그리고 시진핑의 생각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²⁸ 이는 명백히 역사 왜곡이며 뿌리 깊은 중화주의의 발로로, 시 주석의 흥심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다. 중국의 패권적 대국주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데에 매우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과 함께 미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포용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민주국가 vs 공산국가’의 적대관계에 놓였다. 거의 20년 동안의 적대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전략의 일환으로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열면서 마감되었다. 그리하여 세계사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졌다. 그 후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과 중국 양국은 경제 협력과 상호 의존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20년의 적대관계와 50년의 협력관계의 미·중 70년사는 다시 새로운 차원의 대결구도 위에서 적대관계로 돌아가는 중이다.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세기의 부흥전략 사이에서 한국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분명 세계 속의 한국의 한층 높아진 위상과 함께 우리 한국의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Geo-Political)·지전략적(Geo-Strategic)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의 힘’ 차원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날 19세기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와 20세기 세계적 냉전체제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

28 조민, 「시진핑 주석의 망언,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허핑턴포스트_(온라인), 2017년 4월 22일, <https://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6160524.html>.

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세계사의 단순한 객체였으며, 강대국 패권 각축 속에 한갓 피동적 존재에 불과했다. 국권상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바람과 의지는 농락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의 세기적 갈등 속에 한국의 자율적 공간이 한층 커졌고, 한국의 국방력도 결코 주변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은 지금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길은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 세계적 패권국가의 경쟁과 대결구도 위에 한국의 스탠스와 전략적 선택은 패권구도의 향방을 가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의 근본은 '자주자강'(自主自強)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한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주자강은 한·미동맹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21세기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판 '그랜드 세계전략'(Korean Global-Grand Strategy) 수립이 절실하다. 한반도에 대한 외부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고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당장 동북아 지역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야 한다. 세계를 조망하는 크고 넓은 시야가 요구된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문제 접근 방식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구도에서 한반도는 '평화의 허브'가 되어야 하며 미국·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의 대륙세력을 견인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이어왔으며, 마침내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 섰다.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보고는 2021년 11월 말 송고 원고임)

참고문헌

- Allison, Graham 저,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 Kissinger, Henry A. 저, 권기대 역,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2.
- Pillsbury, Michael 저, 한정은 역, 『백년의 마라톤』, 서울: 영림카디널, 2016.
- 로버트 C.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연설(2020.06.24),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세계 야망”(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kr.usembassy.gov/062620-the-chinese-communist-partys-ideology-and-global-ambitions/>>.
- “바이든, 중국 겨냥해 “규칙 기초한 국제질서 위협 우려”, 『연합뉴스』, 2021년 10월 28일.
- 조민, “돌아온 미국: 국제주의와 리더십 회복”, 『폴리뉴스』, 2021년 1월 25일, <<http://www.polineews.co.kr/news/article.html?no=482936>>.
- 조민, 「시진핑 주석의 망언,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허핑턴포스트』(온라인), 2017년 4월 22일, <https://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6160524.html>.
- 존 서드워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극 혹은 위협」 『BBC News/코리아』, 2021년 7월 3일.
- 「시진핑 “어떤 국가도 중화민족 위대한 꿈 막지 못해” 『경향신문』(온라인), 2020년 7월 31일,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7311422001#c2b>>.
- 「시진핑 “중국 괴롭히면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깨져 피흘릴 것” 『연합뉴스』(온라인), 2021년 7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66000704>>.
- 「主動作爲… 중국 세계전략의 전환」 『조선일보』, 2013년 12월 2일.
- 「[중공산당 100년] ② ‘중국붕괴론’ 넘었지만 ‘차이나 포비아’ 확산」 『연합뉴스』, 2021년 6월 20일.
- 「중국, “시진핑 사상으로 제 갈 길 갈 것” 『한겨레』(온라인), 2021년 11월 12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19122.html>>.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동지침—19차 당 대회로부터 보는 시진핑 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신화망』(온라인), 2017년 10월 21일, <http://kr.xinhuanet.com/2017-10/21/c_136693812.htm>.
- Allison, Graham: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5, 2015.
- Brands, Hal and Beckley, Michael, “China Is a Declining Power—and That’s the Problem(The United States needs to prepare for a major war, not because its rival is rising but because of the opposite)”, Foreign Policy(online), September 24,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9/24/china-great-power-united-states/>>.
- Brandw, Hall and Gaddis, John Lew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 Cai Xia, “The Party That Failed – An Insider Breaks With Beijing”,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21.
- Hal Brands, “The Emerging Biden Doctrine: Democracy, Autocracy, and the Defining Clash of Our Time”, Foreign Affairs, June 29, 2021.
- Hass, Ryan and Armacost, Michael H., “The U.S. Is Still Beating China in Human Capital— For Now”, Foreign Policy(online), November 4,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1/04/china-human-capital-stem-graduates-competition/>>.
- John J. Mearsheimer,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 Minxin Pei, “China’s Coming Upheaval”, Foreign Affairs, April 3, 2020.
- Rosen, Daniel H., “Xi Is Running Out of Time: China’s Economy Heads for a Hard Landing”, Foreign Affairs, November 5, 2021.
- Sher, Nathaniel and Bresnick, Sa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ill Thinks It Owns the Future”, Foreign Policy(online), November 21,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11/21/the-chinese-communist-party-still-thinks-it-owns-the-future/>>.
- Thayer, Bradley A. and John M. Friend, Opinion Contributors, “The dark side of powerful China — its repression — can benefit US”, THE HILL, January 9, 2019.
- “Xi Jinping Aims to Rein in Chinese Capitalism, How to Mao’s Socialist 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online), September 20, 2021, <<https://www.wsj.com/articles/xi-jinping-aims-to-rein-in-chinese-capitalism-how-to-maos-socialist-vision-11632150725>>.

평화·통일교육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조정아

남북한 출신이 이웃으로 함께 살기 · 이향규

평화·통일교육의 갱신을 위한 다섯가지 테제 · 이동기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

I. 시작하며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통일교육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남북 간의 관계, 북한 및 우리에게 대한 인식 등의 ‘분단의 심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¹에 의하면, 북한 이미지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평화실현 방식과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통일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긍정 이미지와 긍정 정서이며,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및 압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제로섬 인식과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²

한편,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국민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국민보다 더 많

1 박주화 외 공저, 『한국인의 평화의식』(서울: 통일연구원, 2020).

2 위의 책 163쪽.

고, 남북관계에 따라 다소간의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북한에 무관심한 국민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에 실시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은 61.1%이다. 특히 2030 세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욱 낮다.³

북한에 대한 인식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인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는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하 『방향과 관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⁴ 이전 정부 시기에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과 함께 올바른 북한관 정립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⁵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균형 있는’ 또는 ‘올바른’ 북한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통일·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지만, ‘균형 있는 북한관’과 ‘올바른 북한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 평화·통일교육의 다른 네 가지 교육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 제시나 사회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제 11조)이 있기 때문에, 학교 등 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에 관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

3 이상신 외 공저,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20).

4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6~8쪽.

5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7쪽.

고 있는지를 통일교육 관련 정부의 지침서와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부 지침서의 북한 이해

통일교육에서 북한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성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명시되어 있다. 이전 시기에 『통일교육 지침서』를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성, 내용,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교육 방향성과 관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지만, 『방향과 관점』은 여전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규율하는 정부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은 『방향과 관점』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방향과 관점』에 따르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즉, ‘균형 있는 북한관’이란 북한을 “같은 동포 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현 정부 이전 시기에는 ‘균형 있는 북한관’ 대신 ‘올바른 북한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올바른 북한관’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

6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7쪽.

한을 장차 민족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한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⁷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올바른 북한관’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균형 있는 북한관’이 의미하는 바는 『방향과 관점』의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에서도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통일의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⁸ 즉,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으로서 이중성을 갖는 존재인 것이다. 『방향과 관점』에서는 북한이 교류협력의 상대라는 측면과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라는 측면 중 전자만을 강조하게 되면 군사적 대치 하의 현실을 도외시하게 되고, 후자에 치우친 인식을 하게 되면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민족공동체 건설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북한 이해와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향과 관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북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인권 등의 주제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내용 편성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정치·외교 측면에서는 수령제 당-국가체제, 김일성-김정은주의 통치이념, 체제안정과 생존 중시의 대외정책이, 군사 측면에서는 정치적 목적 실현이라는 군의 성격과 비대칭 전력 강화가, 경제 측면에서는

7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7쪽.

8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13쪽.

이중경제 구조, '경제건설 집중노선' 중심의 정책, 제한적 대외개방 등이 서술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문화 관련해서는 시장화 이후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 변화 및 계층구조 변화, 주민 통제, 사회주의체제의 문화 특성이 결합된 전통 문화 등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북한 주민 인권 등이 서술되어 있다.⁹

III. 초중등 교육과정 속의 북한 이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초중등 교육과정 중 북한 관련 내용은 주로 도덕과,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북한 이해 부분 성취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중 북한 이해 부분

학교급	과목		소주제	성취기준
초	초등통합 (1~2학년)	바른생활	우리나라	[2바07-01]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슬기로운 생활	우리나라	[2슬07-02]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즐거운생활	우리나라	[2즐07-02]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중	사회(역사포함)/도덕(1~3학년)	도덕	북한이해	[9도03-06]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국어(1~3학년)		통일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9국04-09]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9 위의 책, 22~27쪽.

학교급	과목		소주제	성취기준
고	공통과목	한국사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통일 노력	[10한사07-04]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한다.
	선택과목	한국지리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12한지07-02]북한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 북한 개방 지역과 남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한다.

자료: 조정아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교육부, 2019), 27~28쪽 표를 재구성.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학교 도덕과에서는 북한 이해 관련 성취기준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이해’와 ‘균형 있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방향과 관점』에서 강조한 북한 이해의 관점과 동일하다. 중학교 도덕과 북한 이해 소주제의 세부 성취기준으로는 “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②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③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성취기준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 반영되는데, 중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 등의 과목에서는 교과서 집필기준이 제시되어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진다.¹¹ 2015 개정 교육과정 통일교육 관련 집필기준 중 북한 이해 부분은 다음 〈표 2〉와 같다. 집필기준도 성취기준과 마찬가지로 『방향과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이해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도덕과에서는 ‘경계대상’인 동시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10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서울: 교육부, 2015), 22쪽.

11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4호 (2019), 34쪽.

동반자라는 북한의 이중성과 균형적 관점,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북한실태 평가 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북한 정권은 경계대상, 주민은 동반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 하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통일교육 관련 집필기준 중 북한 이해 부분

학교급	과목	집필기준
중학교	국어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 갖기에 관해서는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은 군사적·안보적 경계대상이며, 북한 주민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라는 점을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기술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걸쳐 소개하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이때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직한 통일은 평화, 인권, 정의,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대북지원문제, 북핵문제 등에 관해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한국사	제헌헌법이 지향한 민주공화국이라는 틀과 내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 정치와 남북 관계의 변화는 국제 정세의 동향에 유의하면서 설명한다.

자료: 조정아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9~31쪽 표를 재구성.

집필기준에 나타난 북한 인식의 특징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교육내용은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없다.¹²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에서는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인식과 보편적 가치 관점에서의 북한이해를 강조하고 있

12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4호, 34쪽.

다.¹³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1개 소단원에서 북한 사회의 가치관,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모습을 4쪽 내외의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⁴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치 부문에서는 북한 권력이 조선 노동당과 1인 지도자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참여가 제한되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 의식주 문화, 학교생활, 일상생활, 문화예술,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¹⁵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주로 거시적 북한 체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많지 않다.¹⁶

IV.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

1. ‘균형 있는’ 북한 이해와 논쟁수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과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는 ‘균형 있는 북한관’이 강조되고 있다. ‘균형 있는 북한관’이란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정부의 지침서와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인식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객관적 이해’와 ‘북한의 이중성’을 제시하고 있다.

13 위의 논문, 34쪽.

14 위의 논문, 44~45쪽.

15 위의 논문, 36~37쪽.

16 위의 논문, 45쪽; 신원동,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북한 일상생활연구 성과의 활용」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2호(2016), 232쪽.

북한 이해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방식에 대해, “사회과학에서 객관적 이해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다.¹⁷ 이는 문자 그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본다는 뜻이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본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결론은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북한 이해에서 우리가 제삼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회과학에서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사회과학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식주체의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이해, 즉 인식주체와의 관계를 배제한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은 누가보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해석에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 즉 “특정한 연구자가 이끌어낸 결론이 사회과학계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서 비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사회과학에서의 객관성에 대한 Giddens의 정의를 북한 이해에 적용한다면, ‘객관적인 이해’란 주관적 관점을 배제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해하는 여러가지 ‘경쟁적인 관점’을 다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방향과 관점』에서 북한 이해 교육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 북한 사회에서 발생한 일들이나 북한 사회에 실재하는 사실(fact)들에 기반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로는

17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객관적>>

18 Giddens, Anthony 저,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서울: 을유문화사, 2001), 586쪽.

상반되는 수많은 사실의 조각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할 것인가는 관점이 개입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이나 교육과정에서는 ‘객관적인 북한 이해’라는 말 대신 ‘균형 있는 북한 이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양팔저울에서 균형은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북한 이해에서는 인식주체의 관점과 시각이 저울의 받침점에 해당한다. 현재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절대적으로 옳은 고정된 저울의 받침점이 있고 그것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지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균형’의 지점을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균형의 지점은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상당히 바뀌기도 한다. 실제로는 남북관계에 따라, 정권교체 시 정부 대북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북한 이해의 ‘균형’을 교육현장에서는 마치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균형 있는’ 북한 이해의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인식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관점,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관점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북한 사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접근이 어렵고 특정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모든 교육과정은 교수자의 가치관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교재와 관련 지식은 특정한 가치관점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은 많은 다른 관점들을 함께 제공할 때 균형있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이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단일한 이해, 한 가지 설명 방식, 단 한 가지 지점의 균형을 완성된 형태로 주입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이야기, 각자의 균형 지점을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¹⁹ Harris, I. M. and M. L. Morrison. *Peace Educati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3), pp. 167.

스스로가 자신만의 균형의 지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계몽으로서의 통일교육을 통일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바꾸어가는 것, 즉 정답을 가르쳐주는 통일교육에서 사유하고 토론하는 통일교육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윤리적 관점에서 답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과 분단, 통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교실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소통되는 가운데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를 얻고, 숙고·성찰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관점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저울에서 균형을 맞추는 받침점의 위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말이다. 북한 이해의 ‘균형’ 지점을 정부가 제시하는 대신, 학습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다른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접하고, 동료 학습자들이나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인지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때로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북한 이해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논쟁수업은 이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하나이다. 논쟁수업은 근래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통일교육, 북한 이해 교육에서도 논쟁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논쟁수업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북한 이해 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답 찾기, 하나의 정답 찾기, 양자택일적 토론, 암시된 결론” 대신 “모든 의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다양한 의견, 감성, 가능성 간의 대화”²⁰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20 이대훈,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서울: 피스모모, 2016), 60쪽.

다. 논쟁수업을 북한 이해 교육에 적용할 경우, 나와 다른 견해, 또는 정부의 공식 관점과 다른 관점은 바로잡아야 하는 틀린 견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확장하기 위한 학습의 자원이 된다. 다른 견해와 관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평화교육에서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논쟁수업 방식의 북한 이해 교육은 평화교육과 연결된다.

토론과 논쟁의 교육방법을 북한 이해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수업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²¹ 혐오표현이나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 등 모든 종류의 주장과 견해를 다 허용해야 하는가 등²²이 그것이다. 논쟁수업 모델에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가치상대주의, 가치습득의 임의성의 위험, 개인정체성과 공동선 사이의 괴리 문제 등도 중요한 쟁점이며²³, 우리의 학교 교실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북한 문제를 논쟁적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도 숙고해보아야 한다. 논쟁수업을 통일교육과 북한 이해 교육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독일 정치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처럼 교육계 및 관련 학계의 논의와 교육실천을 통해 교육적 원칙을

21 논쟁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문제는 평화교육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David Hicks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교사의 역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어떤 문제든 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적인 견해들을 제시함으로써 균형잡힌 모습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학습과정에서 교사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다양한 견해들을 보호해주고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화시킬 가능성을 막아준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견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다. Hicks, David 저,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서원, 1993), 26~27쪽.

22 김병연,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126호 (2019), 325쪽.

23 조상식,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제41권 3호 (2019), 169쪽.

설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이중성' 인식에서 '관계성' 인식으로의 전환과 당사자인 북한의 관점 다루기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지침서와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인식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객관적 이해'와 함께 '북한의 이중성'을 인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중성이란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을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협력의 상대"라는 측면, 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지침 하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게 가르쳐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국제관계 속에서 경계대상이자 협력대상인 존재는 북한 하나에 불과한가? 늘 온전한 경계대상 또는 적이거나, 늘 온전한 협력대상 또는 우방인 상대가 과연 존재하는가? 경계대상이자 협력대상이라는 두 가지 속성은 모든 국가 간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고, 국제정세나 양국 간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계와 협력의 비중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그토록 자명한 사실을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왜 유독 강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통일교육에서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양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해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보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미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²⁴ 이는 네 가지 중

24 이상신 외 공저,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 연구』, 64쪽.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존의 통일의식조사 방식과 달리, 국민 개개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중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양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또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큰 진폭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2017년에는 국민들이 북한을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협력대상,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에는 협력대상,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2019년 2월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다시 반전되었다.²⁶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특별히 한쪽으로 경도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북한의 '이중적' 속성이 통일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국제질서 속의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와는 차별화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은 적이고 경계대상이자 한민족이고 협력대상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북한의 이중성 자

25 위의 책, 64쪽.

26 연도별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위의 책, 64쪽.

(단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4	2019.9	2020
북한인식								
지원대상	45.8	50.0	52.7	32.6	43.7	45.8	36.8	41.5
협력대상	37.4	46.1	47.5	36.3	52.6	56.3	52.3	53.0
경계대상	59.1	62.1	65.0	75.5	58.2	54.5	58.5	62.2
적대대상	52.1	49.9	50.3	58.0	45.0	39.7	47.5	46.5

체가 특정한 대상의 속성이기보다는 역사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이중적 속성 자체보다는 남과 북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북한 이해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 이해 교육에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에게 경제대상인가, 협력대상인가?”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은,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의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가?”, “남과 북의 주민들은, 남과 북의 생명체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현재의 남북 간의 관계성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이제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들이다. 남북한의 국가체제뿐 아니라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서로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를 적대적 타자로만 여기고 있는 현재의 분단체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라는 공동 생존의장에서 나의 위치, 나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타인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이다.

남과 북의 관계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인 북한의 관점과 입장이다. 현재 통일교육의 북한 이해에서 ‘북한의 이해’와 ‘북한의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대상이고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북한 사회나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입장이 북한 이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통일 관련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를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집필 기준으로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학생들이

형성하도록 집필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²⁷ 성취기준, 집필기준, 교과서에 등장하는 ‘통일 한국’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통일의 당사자 중의 하나인 북한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남한 중심 사고의 반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라는 공동 생존의 장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연결된 존재인 남북한의 관계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 이해 교육에서 실증된 북한의 관점과 북한의 이해를 사고와 논쟁과 비판적 성찰의 영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북한 관련 특정한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입장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 역시 ‘균형 있는’ 북한 이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은 지난 시기 통일교육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북한의 관점과 입장을 다루지 않는 북한 이해 교육은 진정한 ‘평화교육’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체제 중심 접근에서 일상 중심 접근으로 전환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북한 정권은 ‘군사·안보적 경제대상’, 북한 주민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의 『방향과 관점』에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관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이분법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전 정부 시기의 『통일교육지침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27 조정아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6쪽.

때문이다.²⁸ 북한 정권과 주민을 각각 대립적 특성을 갖는 동질적 대상으로 고찰시켜 설명하는 이분법적 서술은 북한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북한 정권=악, 북한 주민=선(또는 피해자)’이라는 피상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체제 중심의 교육내용과 결부되면서 극대화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북한 이해 부분의 교육내용은 거시적 체제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두세 시간 동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추상성이 높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예를 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삼대세습, 일당독재, 김정은 정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징화된다.²⁹ 이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일 기피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해 교육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과 거시적 구조, 정치체제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일상 중심의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상 중심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 등 정부 지침에 명시된 북한 이해의 전 영역에 걸친 지식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잘 이해하기 위해 ‘통일골든벨’ 퀴즈에 나올법한 북한 관련 지식을 모두 섭렵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 문해능력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만 갖추고 있다면 초등학생이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28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올바른 북한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통일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상대이지만, 북한 체제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29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4호, 44쪽; 이상희, 「북한 일상생활 중심의 통일교육 교재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14호 (2017), 232쪽.

정보와 지식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이다. 북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찾아보면 되고, 가짜뉴스가 걱정된다면 정보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도록 하면 된다. 문제는 북한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찾아보고 싶게끔 만드는 것, 북한에 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연결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북한 이해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상을 통한 접근은 체제에 대한 설명을 도외시하거나 북한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거나 흥미 위주의 소재를 다루는데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기반 위에서 일상을 영위한다. 북한의 일상에 대한 접근은 우리와 다른, 동시에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체제의 힘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 속 일상을 관통하며 작동한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남한 주민들의 일상은 같으면서도 다른데, 일상의 차이에는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인 동시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분단체제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IV. 마치며

이 글에서는 현행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통일교육 관련 정부의 지침서와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이 평화·통일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사실에 기반한 교육과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통일부 지침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균형 있는’ 관점,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북한실태 평가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인식도 눈에 띈다. 또한,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주로 정치, 경제 등 북한 체제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북한 이해 교육 실태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이해 교육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이해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객관성은 인식주체의 관점을 배제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관점을 다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절대적이고 고정된 북한 이해의 ‘균형’을 정부 지침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인식의 구성적 특성과 유동성을 인정하고 학습자 개개인이 다양한 관점의 소통과 비판적 성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 이해의 균형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논쟁수업은 이와 같은 전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둘째, ‘경계대상’이자 ‘협력대상’이라는 이중성은 오늘날의 국제관계 속에서 유독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북한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추는 북한 이해 교육에서 남과 북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계대상과 협력대상 중의 양자택일, 또는 균형맞추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공동 생존의 장에서 나의 위치, 나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타인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과 북의 관계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인 북한의 관점과 입장이다.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북한 이해 교육에서 실종된 북한의 관점과 북한의 이해를 사고와 논쟁

과 비판적 성찰의 영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거시적 체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일 기피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과 거시적 구조, 정치체제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일상 중심의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상을 통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인 동시에,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분단체제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위기가 곧 나의 건강위기가 되고, 우리가 지구생태계에 가한 위해가 우리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안전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된 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면서, 북한 이해 교육의 본질은 팬데믹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당연한 진리와 맞닿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 이해 교육이란 북한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공동 생존의 장에서 나의 위치를, 나와 북한 주민의 관계를, 그 관계의 역사성을 돌아보는 일이다. 이는 자신과 타자,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이해 교육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통합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 한반도의 이웃 국가들, 더 나아가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것이 북한 이해 교육이, 그리고 통일교육이 평화교육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2015.
- 이대훈,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6.
- 이상신·민태은·윤광일·구본상·Peter Gries,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조정아·박주화·김지수·정용민·김병연,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2019.
-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Giddens, Anthony 저,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Hicks, David 저, 고병현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 Harris, I. M. and M. L. Morrison: *Peace Educati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3.
-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4호, 2019.
- 김병연,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126호, 2019.
- 박주화·강해석·장철운·Steven Soman·Eran Halperin·Babak Hemmatian·Nimrod Nir,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신원동,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북한 일상생활연구 성과의 활용」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2호, 2019.
- 이상희, 「북한 일상생활 중심의 통일교육 교재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14호, 2017.
- 조상식,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제41권 3호, 2019.

남북한 출신이 이웃으로 함께 살기

●
이향규

런던한겨레학교 교장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곳에서, 나는 지금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곳은 영국이다.

런던 외곽 뉴몰든에 있는 우리 학교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남과 북에 고향을 둔 어른들과 그들의 자녀가 모인다. 부모의 고향이 어딘지 묻지 않아서 나는 어떤 아이의 엄마가 북한 사람인지 혹은 남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 (처음에는 억양으로 짐작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한다.) 북한 출신 부모가 아직은 더 많다는 것 정도를 알 뿐이다.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의 출신을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다. 2016년에 런던한겨레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난민 지위를 받고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한인사회는 오랫동안 우리 학교를 ‘탈북자 학교’라고 불렀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 정착해서 사는 남한 출신 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 운영은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한다. 이사회

경우, 이사장은 학교의 취지와 뜻에 공감하고 오랫동안 후원해 주는 남한 출신 독지가이다. 이사진 네 명 중 2명은 북한 사람이고 2명은 남한 사람이다. 교사는 현재 모두 남한 사람들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우연에 가깝다. 얼마 전까지는 북한 출신 교사도 있었다. 나는 이 학교의 3대 교장이다. 그 전까지 교장 두 사람은 모두 북한 출신이었다.

이쯤 되면 ‘한겨레’ 학교라는 명칭을 쓸 만하다. 내게 이곳은 남북한이 함께 사는 모습을 경험하고, 그 모습을 지키고, 필요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소중한 무대이자, 실험장이자, 교육 현장이다. 한반도 밖에서 (어쩌면 밖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고 고맙다.

영국에 이주한 후에 나는 뜻하지 않게 북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났고, 결국 지금은 그들과 함께 일한다. 그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새로 배우게 된 것들에 대해 들려줄까 한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 남과 북이 그 런대로 평화롭게 함께 사는 어떤 사회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I. 분단이 디폴트 상태인 곳, 떠나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교육학을 전공한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다 보니 북한 사회와 교육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잘 납득이 안되는 그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공부를 마치고는 북한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에 대해 가르쳤다. ‘북한이탈주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지난 50여 년 삶은 ‘분단된’ 땅에 묶여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한반도는 그 상태였으니, 남북으로 갈려서 반목하지 않는 시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분단은 내가 던져진 공간의 초기값이었다. 그 공간이 사람을 제약하는 힘은

강력해서 내 마음과 행동거지는 그 틀에 맞게 형성되었다. 늘 그렇게 살아서 인지 그 마음 꼴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그 공간을 벗어난 후에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살던 곳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오랫동안 찬찬히 계획하고 떠난 이민은 아니었다. 가족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건강이다, 아픈 남편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자기 나라일 수 밖에 없었다. 2016년 봄,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한국을 떠났다. 나는 남아서 살림을 정리했다. 이삿짐을 부치는 날, 쓰던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컨테이너 안에 차곡 차곡 쌓이는 것을 보고, 이 짐을 풀게 될 곳이 영국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하고 살지 아무 것도 모른 채, 나도 떠났다.

II. 선배 이민자들

이삿짐은 바다를 건너 넉달 만에 도착했다. 우리 가족은 그동안 임시 거처에 묵고 있었다. 드디어 제대로 살림 살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 일찍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우리가 이제 이사하게 될 집 앞에 멈췄다. 사장님과 직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데, 뜻밖에(나는 영국인이나 다른 유럽사람일거라고 생각했다) ‘코리안’이었다. (이 글에서 ‘코리안’은 한반도 남과 북 출신 사람을 모두 아울러야 할 때 사용한다. 그들을 통칭할 때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조선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직 우리 말에는 “코리안”을 부를 마땅한 단어가 없다.) 사장님은 남한 사람이고, 두 직원 K와 L은 북한 사람이었다. 영국에 온 후 뜻하지 않게 북한 사람을 만났다. 벌써 두번째다.

첫번째로 만난 북한 사람은 M이었다. 우리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코리안은 고작 열 명도 안되는데 그 중에 북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일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꽤 있었지만, 그건 질적연구를 위한 인터뷰나 지원 사업을 하는 동안 잠깐씩 만나고 만 것이었다. 이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사는 이웃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M은 시내에서 제법 큰 일식집을 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한 날에 그 곳에서 외식을 했다. 그러면 M은 인심 좋게 스시롤이나 김치를 서비스로 내주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는 때때로 그녀의 도움을 받았다. 딸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 경험 (work experience)’을 해야 하는데 적당한 일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도 M에게 부탁했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주일 동안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며 일을 배울 수 있었다. M은 한식 재료를 사러 멀리 장을 보러 갈 때면 내게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곳에 온 처음 몇 해는 그렇게 해서 두부를 샀다. 그녀는 선배 이민자가 새로 온 고향 사람을 챙기듯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삿짐을 옮기는 K와 L의 체구가 너무 작아서, 오래된 냉장고나 소파를 굳이 바리 바리 싣는 것이 미안해졌다. 그래도 그들은 다부진 몸으로 큰 짐을 요령있게 부렸다. 점심으로는 컵라면을 먹었고 담배 피는 시간 빼놓고는 별로 쉬지도 않았다. 영국에 온 후,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에 명치 끝이 답답했는데, 막힌 속이 빵 풀리는 듯 했다.

사장님께 물었다. “북한 분들과 일하는 것은 어떠세요?” 칭찬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 말이 뜻밖이었다. “일 잘 못해요. 여기 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교육 잘 받은 질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네.”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불편해졌다. 그는 왜 자기 일을 돕는 직원에 대해 처음 보는 (그리고 다시 안 볼) 내게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더 가깝다고 느꼈을까? 남한 사람이라서?

이내 곧 내 실수를 알았다. 애초에 ‘북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 잘못이었다. 조목 조목 반성했다. 첫째, 일하는 능력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묻은 것이 어리석었다. 남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사람 중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다. 둘째, 특정 집단과 일하는 것이 어떠한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북한 사람들 대신 다른 집단(예컨대 한국 사람, 무슬림, 여자, 장애인 등)을 넣어보니 이게 얼마나 분별없는 질문이었는데 줄 알겠다. 내가 사장에게 “여子들과 일하는 것은 어떠세요?”라고 묻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묻고 있었다. 셋째, 내 질문은 남한 사람에게 북한 사람을 등 뒤에서 평가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험담이 아니라 칭찬을 기대하고 건넨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찌면 한 공간 안에 있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한 것과 다름 아닐 수도 있다. K와 L이 일하는 것이 만족스러웠으면 내가 그들에게 직접 고맙다고 인사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사장님의 까칠한 답변을 탓할 일이 아니었다. 애초에 내가 그런 식으로 묻지 말았어야 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K와 L을 따라다니며 이삿짐을 옮기고, 가게에서 음료수와 담배를 사오고, 담배를 필 때 옆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도 내게 이민자 선배가 후배에게 해 줄 법한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이래저래 배울 게 많았다.

III. 어떤 관계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진다

짐도 다 오고 이제 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고쳐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집수리하는 영국 사람 서너 명에게 진작에 견적을 부탁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공사는 기약이 없었다. K가 집수리도 한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 나서 연락을 했다. 전화번호를 받아두길 잘했다. 그는 당장 다음날 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았다.

고칠 곳을 살펴본 후 일을 맡겠다고 했다. 그들이 사는 런던 뉴몰든에서 우리 집까지는 차로 두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은 어려우니 아예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자면서 일을 하기로 했다. K와 친구들은 사흘 후에 연장과 함께 쌀, 김치 등 식재료와 전기밥솥, 이불을 싸들고 어벤저스팀처럼 돌아왔다.

듬직하고 고마웠다. 그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텐데, 그동안 내가 그런 렌즈로만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되었다. 어쩌면 내가 그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한 면만 보인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지원해 주는 사람과 지원받는 사람으로 만났다. 나는 관찰자 아니면 베푸는 사람이었으니 지금처럼 이웃으로 살면서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 불균형한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

공사 하는 동안, 나는 저녁에 닭도리탕 같은 것을 끓여서 가져갔다. 반주도 챙겼다. 늦게까지 같이 먹고 마신 날도 사나흘 된다. 어느 날 K가 말했다. “집주인이 닭도리탕을 끓여준 일은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들 집에 일 가면 물한잔을 안 줘요. 물을 찾으려면, 사서 먹으라고 해요.” 나는 사실, 그때도 지금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야박한 집 주인을 한 두 사람 만났을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그토록 인색할 리는 없다. 내가 아는 한, 자기 집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참을 챙기거나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정서이다. 어쩌면 그는 불쾌했던 경험 몇 번으로 한국 사람들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는 영국사람 집 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 말에 괜히 내가 섭섭해졌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탁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났다. 나는 만족스러웠지만, 그들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영국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을, “하는 김에 이것도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 계획에 없는 자잘한 일이 짜증났을 법한데, K는 내색하지 않고 선선히 해주었다. 그들은 심지어 승합차로 우리가 임시로 살던 거처의 짐도 옮겨주었다. 내가 얼마를 사례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영국의 이사 서비스를 부르는 것에 비하면 아주 험한 값임에 틀림없다. 나도 이미 야박한 남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IV. 노스에서 왔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는 선배가 뉴몰든 한인 커뮤니티 연구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뉴몰든에 가 본 적이 없어서, 선배의 인터뷰에 동행했다. K에게 연락해서 그때 우리 집 공사를 해주신 분들께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번에 신세진 것이 미안하고 고마웠다. 겸사 겸사 K씨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다.

이주민이 된 후, 그 전과 달리 가장 많이 받게 된 질문은 아마 “어디서 왔냐(Where are you from)?”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물었던 질문이다. 외모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었고, 또 더러 묻기도 했다. 상대방의 출신을 안다고 해서, 후속 대화가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했다. 어쩌면, 물을 수 있으니 (혹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다. 정주민은 이주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다.

그런데 이주민이 되어보니 이 질문을 받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이걸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질문이다. 남이 나더

러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날보고 다짜고짜 “니하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만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보통은 선선히 답해준다. “나는 코리아에서 왔어요(I'm from Korea).” 그러면 옆에 아홉은 이렇게 묻는다. “북이에요, 남이에요 (North or South)?”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내가 북과 남 어디 출신인지가 딱히 궁금할 리 없다. 이걸 아무래도 묻는 사람이 ‘나는 코리아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다. 하긴 가끔이라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가 있다지만, 그래도 전국 방송에 나오는 코리아에 대한 소식은 북한의 식량난이나 미사일 발사,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 같은 뉴스가 대부분이다.

딸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나보다. 큰딸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맞춘 기념 후드티 등판에 ‘North or South’라고 새겼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나 별명, 좌우명 같은 것을 적었다.) 그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었다. 우리는 영국에 와서 오히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코리아 앞에는 노스 혹은 사우스가 접두사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사우스에서 왔어요”라고 답하면서 궁금해졌다. 북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 한국에 있는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가급적 감추려고 했다. 북쪽 억양을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한국사람이 많이 쓰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가족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는 경우가 70%나 되었다. 여기서도 그럴까? 영국 뉴스에 보도되는 북한사회의 모습도 그리 긍정적인 것이 아니니, 이들도 괜히 노스라고 말해서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느니 사우스라고 하지 않을까 짐작했다. K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노스에서 왔다고 그래요.” K가 너무 선선하게 대답해서,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묻는 내 속마음이 오히려 불순하게 느껴졌다. 변명하면서 또 물었다. “한국에서는 잘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중국 동포라고 하거나, 강원도 출신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노스에서 왔다고 말하면 영국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별 얘기 안해요. 근데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떠나는 게 어려웠을텐데 용감하다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간혀 있던 사고 틀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솔직히 이들이 북한 출신임을 부끄러워할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는 북에서 왔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당당히 밝힌다면, 그건 자신의 고향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두 상황에서 다른 것은, 그들과 마주 선 사람의 반응이다. 타인의 시선이, 말이, 행동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출신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 당연한 일을 나는 참 늦게도 안다.

K는 이날 저녁 식사비를 자신이 냈다. 나와 선배, K씨의 친구들까지 여섯 명이 한식당에서 온갖 요리와 술을 마신 식대는 300파운드(약 50만원)나 되었는데, 그는 일찌감치 계산해 놓고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는 법이 어디있냐고, 오늘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니, 그는 다시 그 닭도리탕 얘기를 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도대체 그 닭도리탕은 얼마짜리란 말인가.

V. 탈북자 딱지 떼기

런던 남서부 외곽에 있는 뉴몰든은 영국과 유럽을 통털어 코리안이 가장 밀집해서 산다는 대표적인 한인 타운이다. 그 일대에 사우스 코리안이 약 2만 명, 노스 코리안도 1천명 정도 거주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사연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살기 시작한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왕년에”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도 묻지도 않는 편이 현명하다. 영광이든 고통이든 왕년은 다 지난 시절이다.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마음 먹은 편이 좋다.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궁금해도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묻지 않았다. 한국에 있을 때 연구나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면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탈북 과정’에 대한 것을 질문했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된 사람에게도 자꾸 그것을 물었다.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화했지만, 물으면서도 이런 질문이 오히려 정착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서는 피차 낯선 땅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민자로 만난다. 나는 지금의 관계가 훨씬 좋다.

런던한겨레학교 교장이 되기까지 몇 번의 징검다리 인연이 있었다. 첫 번째 디딤돌은 통일연구원 선배와 처음으로 뉴몰든에 갔을 때 인터뷰 했던 최이사였다. 그는 런던한겨레학교를 세운 장본인 중 하나였다. 선배와 하는 대화를 통해 이 학교 얘기를 처음 들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라도 해 보고 싶었다. 그 바람이 마음 속에 계속 있었던 모양이다. 이듬 해에 나는 딸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자원 교사를 했다. 어린이들에게 시를 가르쳤는데 그건 내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그 경험을 글로 썼다. ‘고향은 부칸입니다’ <창작과 비평> 2019년 여름호)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3년이 또 훌쩍 지났다. 올 봄에 뜻밖에 최이사 전화를 받았다. 안부 인사로 변두리 얘기만 한참 나누다가, 통화 말미에 나더러 교장으로 와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1년 이상 문을 닫았고 이제 다시 열려고 하는데, 전임 교장이 사정이 생겨 사임했단다.

갑작스런 제안에 생각해야 할 게 많았다. 남편은 아프고, 막내는 수험생이고, 학교는 멀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고 싶었다. 그 열망이 눈

에 그대로 보였나보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애”라고 말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눈빛을 먼저 읽었다. “하지 그래? 토요일 하루인 걸.” 하루 만에 전화를 걸어 하겠다고 했다.

곧 전임 교장 L과 통화했다.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보다 지금까지 이 학교를 꾸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았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어요?” L이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붙은 ‘탈북자’ 딱지를 떼어주고 싶었어요. 부모가 탈북자지, 이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아직도 ‘탈북 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한다. 나도 그렇게 불렀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이면 그 자녀는 북한에 가본 적이 없어도 ‘탈북 청소년’으로 ‘집계’되었다.

VI. 집단으로 부르기 전에 따져보는 것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은, 그동안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나도 한동안 고민했었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한 개인을 집단으로 묶는 이름이 아예 없으면 좋겠고, 누구를 부를 때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집단을 구별해서 불러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두가지 기준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점검해본 후 단어를 택한다. 이견 북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는 기준이다.

첫번째 기준은 ‘내가 상대를 부르는 그 이름으로 내가 불려도 괜찮은가?’이다. 이를테면 내가 영국에서 북한 사람을 ‘탈북자(脫北子)’라고 부르면, 나도 남한을 떠나왔으니 ‘탈남자(脫南子)’라고 불리는 것이 괜찮아야 한다. 그런

데 탈남자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탈북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굳이 출신을 말해야 할 때가 있으면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그럴 때는 나를 ‘남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한국’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누는 것이라 사실 그들에게 공정한 이름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그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어색하다. 이래저래 한반도 북쪽이 고향인 사람을 부를 적당한 말이 없어서 웬만하면 집단으로 부르는 상황을 피한다.

두번째 기준은 ‘그들 스스로 불리기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사실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자신을 “북향민(北鄉民)”이라고 불러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한반도 남쪽이 고향인 사람은 남향민이고 북쪽이 고향인 사람은 북향민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사용했다. 당연히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이 기준에 따라 나는 ‘탈북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영국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재영탈북민총연합회’이다. 협회 이름은 스스로에 대한 공식적인 호명이다. 2008년에 이 협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름은 “재영조선인협회”였다. 이 이름이 지금도 유지되었다면, 나는 기꺼이 이들을 ‘조선인’이라고 불렀을거다. 그런데 이 이름은 2014년에 “재영한민족협회”로 바뀌었다가, 2016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린다. 내부 사정이 있었을거라고 짐작한다. 어쨌든 그들 스스로가 ‘탈북민’이라고 칭하므로 나도 협회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부른다.

얼마 전에 아주 잠깐이지만 나도 ‘탈북자’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줌(Zoom)으로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내가 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발표 끝에 런던한겨레학교에 대해서 소개했다. 행사를 조직한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후일담을 전해줬다. 참석한 선생님 중에 몇분

은 웨비나가 끝날 때까지 내가 ‘탈북자’라고 굳게 믿고, ‘오래 한국생활을 하면 저 정도가 되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같이 웃다가 생각이 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래 전에 조총련계 연구자로 오인된 적이 있었다. 20대였으니 젊었을 때다. 북한 자료를 본다고 미국 매릴랜드 주에 있는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NARA)에서 여름 한철을 보낸 적이 있었다. NARA 소장자료를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방학을 맞아 ‘노획문서’를 보려고 그곳을 방문하는 한국 연구자들이 적지 않았다. 복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다. 사람들은 내가 일본 조총련계 연구자인 줄 알았단다. 북한 사람이 거기 있을 리는 만무하므로, 당시 그들 머릿속에서 북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그린 것 일거다. 외모나 태도가 그랬다고. 그때도 웃고 지나갔지만 궁금하긴 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북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은 농담처럼 “연구대상과 혼연일체가 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칭찬으로 받아 들였다.

VII. 닳은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기

우리 학교 최이사가 자기 집에 김치가 많으니 좀 가져가라고 했다. 큼직한 김치통 두개를 챙겨서 그의 집을 찾았다. 김장비닐에 담긴 김치 두 봉지를 주면서 하나는 묵은지라 김치찌개 끓이면 좋을거라고 했다. 꼭 찬 김치통들을 보니 겨울식량 넉넉히 마련한 것처럼 부듯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남북한 문화차이에 대해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영국에서 보면, 그 ‘다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알겠다. 언어의 차이가 있다지만,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답답함에 비하면, 몇몇 표현이나

억양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이곳에 온 후 그동안 남북한의 문화가 자꾸 ‘다르다’고 말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구성되어 있어서, 사소한 다름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억양이 매우 다르다. 그 차이는 남북한 억양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특히 스코틀랜드 사람이 말할 때는 영어가 아닌 유럽의 다른 언어 같은 착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워낙 이민자가 많다보니 영어 억양은 천차만별이다. (내 영어 발음도 그 다양성에 기여한다.) 그래도 다 소통한다. “다름을 존중하자”는 표어를 내걸지도 않는다. 인간사에서 그 정도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설사 다른 억양과 단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다시 말해달라거나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되는거다.

사실 내 경우,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것은,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미는 아는데 왠지 그 말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 때였다. 일전에 있었던 일이다. 학교에 프로젝터가 하나 필요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하나 골랐다. 워낙 가난한 학교라 20만원쯤 결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최이사와 상의를 했다. 최이사는 “나한테 프로젝터가 하나 있어요. 괜히 돈질하지 말고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 기쁜 소식인데 살짝 마음이 상했다. “돈질”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안 쓰는 말이지만, 그 뜻은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뭐 엄청난 사치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뭔가 비난받는 기분이 들었다. “돈 낭비”라고 말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돈질”이라니! 단어가 전달하는 감정이 달랐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몇번 익숙해지면, 감정은 빼고 의미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필요없는 ‘돈질’은 하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은 널리 알려져 빌려쓴다.

한국에 있을 때,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다름을 존중하자’는 말을 많이 했

다. 그건 일종의 반작용이었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동질성 논리’가 오랫동안 대세였기 때문이다. 동질성만 강조하다보면 정작 남북한 사람이 만나서 다름을 경험하고 당황할 수 있다. 실망하거나, 오해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질화된 것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서로 다름을 알아채고 인정하고 존중해주자는 지적은 옳다. 그런데 혹시, 다른 점을 존중하려고 다른 점을 애써 많이 찾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한국에서 통일교육을 하면서 나는 ‘이질화된’ 언어를 보여주려고 남북한 용어 사전을 만들었고, 달라진 사고방식이나 풍습을 찾아내고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미덕이지만, 남북한 사람이 함께 살 때 이런 접근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동질성 논리’가 남북의 차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질화 논리’가 두 사회에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화적 요소를 하찮게 취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름의 존중’을 강조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그 전까지 “동질성” 논리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찰과 그 반작용이 컸다. 둘째 우리 사회가 매우 (어쩌면 극단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다른 것도 크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세번째로 덧붙일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을 돌아보건대, 나는 남한과 북한이 ‘다른 점’이 많기를 바랬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다르고 싶었다. 경제력의 차이도 그렇고, 취향의 차이도 그렇고, 지도자의 면모도 그렇고, 세계인의 평가도 그렇고, 남한은 북한과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르다고 우겨도, 영국에 와서 보니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언어도 음식도 생활 방식도 놀이도, 비슷한 것이 훨씬 더 많다. 나는 닮은 것이 자꾸 보인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여러가지 놀이를 한다. 얼마 전에 “무궁화 꽃

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놀다가 궁금해서 학부모에게 물었다. “북한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때요?” “제가 어릴 때는 ‘해당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려고 검정색 긴 고무줄을 준비하면서 또 궁금해졌다. “북에서도 고무줄 놀이를 해요?” 엄마들이 말했다. “그럼요. 어두워질 때까지 고무줄 하면서 놀았죠. 저 잘했어요. 고무줄 높이가 높아지면 물구나무서기를 해서 발끝에 걸었어요.” “나는 동생을 업고 고무줄놀이를 한걸요. 동생은 봐야하는데 놀고는 싶고, 그래서 업고 뛰었죠.” “북에서도 남자애들은 고무줄을 끊고 달아났어요. 남에서도 그랬다면서요.”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신이 나서 한참을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은 고무줄 놀이를 모른다.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남북의 차이보다 남한 안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클 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서는 노래도 가르친다. <아리랑>은 물론이고 <고향의 봄> <반달> <오빠생각> 같은 노래는 부모들도 다 안다. 어쩌면 분단 76년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산 세월에 비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점을 드러내고 그걸 존중하자고 말하기 보다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서먹했던 사람이 가까와지려면, ‘우리는 다르니까 다름을 존중하자’고 하는 것보다, 함께 기억하는 즐겁고 좋은 추억을 확인하고 그걸 맞장구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가족끼리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렇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비슷한 것을 더 많이 보려고 한다. 부모세대가 남북한 구분없이 향유했던 공통의 유산을 아이들과 나누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마치 분단이 애초에 없었던 것인 양 짐짓 시치미 떼고, 다음 세대가 분단의 그늘이 없이 자라도록 돕고 싶다. 그 편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람도 있을 것 같다.

VIII. 너무나 평범한, 그래서 특별한.

적고 보니 너무나 평범하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산다. 오해하고, 풀고, 실수하고, 반성하고, 배우고, 나누면서 그럭 저럭.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반갑고 다른 경험이 있으면 세월 탓을 한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된다.

내가 다니는 성당의 영국인 신부님이 몇 년 전에 내게 물었다. ‘당신은’ 통일을 바라나요? ‘내가’ 바라나요? 낯선 맥락에서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답을 찾았다. “네, 나는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분단이 너무 오래되어서, 저는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고통에도 무감해진 것 같거든요.”

통일이 아니어도 좋다. 남북한 사람들이 그냥 이웃으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될지, 어떤 국가 형태가 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대로 평화롭게 사는 상태만 되어도 좋겠다. 내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학교가 문을 여는 토요일 하루는 지극히 평범한 날인데, 분단된 땅에 묶여있었을 때는 이걸 상상하지도 못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여느 날이어서, 이걸 특별하다고 여기는 내가 도리어 어리석게 느껴진다.

평화·통일교육의 갱신을 위한 다섯가지 테제

●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평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장 자크 루소, 1756년 3월 28일 자콥 베른에게 보낸 편지)

I. 평화 ‘점’ 통일교육의 의미

필자가 ‘통일교육’이나 ‘평화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 사이에 가운데 점을 넣어 ‘평화·통일교육’이란 용어를 처음 발의한 것은 2014년 겨울이었다. 당시 필자와 송영훈 박사(현재 강원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 방향을 연구했다.¹ 통일대박론이 활개를 치던 시절이었다. 통일교육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망상적 ‘통일준비’와 선전적 교육방식에 맞서고자 했다. 우리는 그 전부터 더러 사용되던 ‘평화통일교육’이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란 용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평화가 통일의 수식이나 보조가 되는 모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평화를 따로 떼

1 이동기, 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어 통일 앞에 두면서 평화교육의 독자 관점과 인식 지평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다시 통일교육과 연결시키는 방식이 필요했다. 평화와 통일 사이 가운데 점의 의미는 원래 그랬다.

그 새 ‘평화·통일교육’ 용어가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수용되고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니 반갑다.² 여러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 제 나름의 관점과 내용을 제안하니 기쁘다.³ 하지만 애초 우리가 ‘평화·통일교육’ 용어와 관점으로 제기한 것은 자주 오해되었다. 여전히 가운데 점의 의미가 무시되고 그것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오해받는다. 필자가 이해하는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적 수단과 과정을 통한 통일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포괄하지만 그것을 넘는 관점을 담는다. 그것은 일단 평화교육의 보편적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의 인식 지평과 관점을 다양하게 숙고하자는 전제를 가졌다. 그런 후에 다시 통일교육과의 연관성을 따지자는 제안이었다.

당시 필자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결키는 핵심 고리로 ‘적대적 타자상의 극복’과 ‘대화와 협상의 역사’를 초들었다.⁴ ‘적대적 타자상’을 극복하려면 북한을 적이나 악으로 규정한 정치문화와 담론 및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 또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을 넘어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더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

2 교육부 엮음,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세종: 교육부, 2018);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강원도교육청 엮음,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 실현을 위한 2020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춘천: 강원도교육청, 2020); 경기도교육청 엮음, 『평화·통일 활성화 계획』 (수원: 경기도교육청, 2020).

3 김상범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김병연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 교육부, 2019); 강순원, 『한반도 분단극복 평화교육으로서 통일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의 조율』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4권 1호 (2019), 1~34쪽; 이슬기,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탈분단 담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5호 (2019), 83~102쪽

4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38~42쪽, 51~54쪽, 89~91쪽 참조.

했다. 필자는 통일교육에서 평화 관점이 전면화 되려면 위의 두 차원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소극적 평화니 적극적 평화니 하는 이분법에 갇힌 채 혼란을 자초하는 논의를 넘는 접근방식이기도 했다. 평화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구조적 폭력’이나 ‘적극적 평화’ 개념이나 관점에 의존하는 관성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⁵ 평화교육은 평화부재의 정치문화 현실과 화해와 협력관계의 역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실천 적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신 타자에 대한 적대성이 평화부재의 문화적 전제임을 밝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 관계의 가능성을 지난 역사 속에서 규명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이 컸다. 통일과 평화를 둘러싼 여러 조건의 변화가 뚜렷하다. 새로운 현실에 조응하는 평화·통일교육의 갱신 지평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평화교육의 관점을 다시 세우고 평화·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II. 평화교육의 관점⁶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이지만 특별한 지위를 점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체적 자기결정과 공동결정 능력을 높이도록 보조하는 교육의 포괄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평화교육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민족 간의 갈등을 문명적으로 해결하고 공존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5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 개념에 대한 비판은 이동기, 「세계시민 관점의 평화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서울: 살림터, 2020) 각주 1, 335~336쪽 참조.

6 이하 이 장의 내용 일부는 이동기, 『현대사 몽타주』 (파주: 돌베개, 2018) 407~413쪽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겹친다.

교육을 지칭한다.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은 갈등을 이성적으로 조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적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겹친다. 하지만 민주 시민교육이 시민 개인의 정치적 주체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교육은 무엇보다 타자와의 공생 관계에 집중한다. 평화교육은 부정이나 불평등의 극복 같은 선한 규범이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지만 적대적 갈등의 이성적 조정과 비폭력적 해결 능력 고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실 갈등 자체는 억눌러야 할 악이 아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는 오히려 갈등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사회적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 수용하고 감당해야 그것을 해결할 조정 절차와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는 획일성과 통제를 반대하고 이질성과 자유를 용인하며 때로는 권장한다. 하지만 이질성이 상호 이익 충돌에 직면하거나 지배·권력 관계의 뒷에 걸리면 '적대적' 갈등이 손쉽게 폭력적으로 '발현'된다. 삶과 사회에 대한 견해와 판단의 차이가 상호배타적인 이익과 요구의 충돌을 넘어 권력행사를 통한 타자 배제와 공존 포기로 이어지면 '비적대적' 갈등은 '적대적' 갈등으로 빨려 들어가며 감정 폭발과 상생을 수반한다. 우리는 삶의 차이와 문화의 이질성이 '적대적'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곳곳에 고리를 걸고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문화이고 그것의 교육적 차원이 평화교육이다.

평화교육은 갈등과 분쟁이 사라진 이상 상태에 대한 망상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평화 규범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다. 평화교육은 적대적 갈등과 폭력 대결이 정치와 일상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장치를 고장 내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평화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집단 또는 민족 간의 적대적 갈등과 대결을 이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며 예방하는 능력을 기르는 문명화 작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를 모든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그 구조적 원인이 말끔히 사라진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평화교육

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야 한다.

평화교육은 온갖 선한 말들이 다 펼쳐지는 향연이 아니다. 그것은 폭력과 혐오를 누르고 예방하며 적대적 갈등의 발현을 막고 갈등과 차이를 이성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쌓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성 같은 선한 규범들에서 출발하거나 그것의 이상적 상태를 다 모아 축성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교육은 타자와의 공생(기회)을 파괴하고 평화적 갈등 조정(가능성)을 차단했던 비평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거부에서 시작한다. 평화 교육은 삶의 차이와 존재의 이질성을 적대적 타자 인식과 대결 의식으로 변질시킨 사회 제도와 문화들에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도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모든 평화가 그렇듯이, 한반도 평화도 ‘프로세스’면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 평화는 행위가 아니라 과정인데, 그것의 단계와 흐름, 시간과 차원은 누구도 모른다. 평화를 ‘프로세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대적 대결 정치와의 근본적 단절을 선언하면서 미지의 긴 도정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직접 성과나 눈앞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반복하며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와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실용적 지식과 현실주의적 태도를 증진하며, 실제적 정보를 통해 조정 능력을 높이고, 흥분을 조절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새로운 정치와 문화를 요구한다. 평화정치와 평화문화는 그것의 수행 주체를 길러내고 확보하는 과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다. 평화교육에 대한 인습적 과잉 의미 부여는 절제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평화정치와 평화문화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것을 지원하고 지지할 뿐이다.

평화부재와는 달리 평화 형성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집단적 학습과 결집 및 창조적 ‘갈등 전환’ 지혜의 발현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평화는 ‘프

로젝트'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고단한 작업이다. 인내와 전망이 동시에 필요하다. 평화는 실험과 모험을 수반하기에 용기와 의지가 결정적이다. 평화교육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청소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와 인내, 전망과 용기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보조하는 과제를 맡는다. 평화교육이 정의와 인권, 평등과 환대 등 모든 종류의 선한 가치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해 부푼 풍선처럼 만들기 보다는 위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은 종속적 권력 관계나 억압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과정과 절차를 전제한다.⁷ 평화를 배운다면서 평화부재의 교육 문화와 학습 분위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공감과 존중은 평화를 배우는 과정의 감정적 토대다. 평화교육은 공포나 위압, 심적 압박 같은 교육 방법의 폐지를 전제한다. 인정과 보호, 존중과 수용 등은 평화교육의 감정적 정서적 기반이다. 그것은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신뢰와 배려, 의존과 포용을 요청한다.

평화교육에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상호 평등과 존중의 원칙을 가져야 함은 감정과 정서 차원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 평화부재 현실을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이기에 각자의 인식과 인지의 조건이 다르지 않음을 전제한다. 특히 학습자 또한 평화 부재의 현실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주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수학이나 언어의 규칙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평화교육은 평화부재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 연관된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의 한 주체임을 전제하기에 평화교육은 그 내용과 형식을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숙의해 창안하는 것을 지향한다.⁸

7 이동기, 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43~46쪽.

8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방법론은 평화교육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그와 같은 평화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피스모모의 관점에 대해서는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9); 이대훈,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6) 참조.

이와 같은 평화교육의 관점이 평화·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과거 국민윤리 교육의 재판이나 지난 박근혜 정부가 몸담았던 국정화 교과서를 통한 획일적 역사교육의 변이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평화교육의 준칙에 의거해 필자는 평화·통일교육의 다섯 가지 인식 지평과 실천 과제를 밝힌다.

III. 평화·통일교육의 다섯 가지 과제

1. 통일은 통다(統多)다

“독일은 하나이면서 여럿이다.(Deutschland ist eins: vieles)”⁹ 2019년 독일 정부는 「평화혁명과 독일통일 30주년 위원회」를 구성해 독일통일에 대한 학문적 정치적 중간 결산을 시도했다. 그 때 위원회가 내건 위의 표제는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동서 독일이 단일 국가로 결합했지만 통일이 동서독 주민들에게 균질적이거나 평등하지 못했음을 직시하는 반성을 담았다. 그 위원회는 통일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동독 주민들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웠던 통일 경험과 현재의 불평등과 차별에도 주목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동독 주민들 사이에도 젠더와 지역, 세대에 따라 통일의 충격과 영향이 상당히 이질적임을 밝혔다. 독일은 통일을 통해 삶의 근간인 제도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통일 후 삶의 조건과 양상, 통일 경험과 일상 및 정체성과 지향은 ‘여럿’이다. 정치 공동체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이질적인 경험과 지향에 뒤늦게나마 눈을 돌린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 너무 늦었다.

우리는 앞서 ‘한반도도 하나이면서 여럿이다.’고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⁹ Judith C. Enders., and Raj, Kollmorgen eds., *Deutschland ist eins: vieles: Bilanz und Perspektiven von Transformation und Vereinigung* (Frankfurt am Main: Campus, 2021).

우리는 때늦은 독일인들의 통일 과정에 대한 성찰 관점을 선취할 수 있다. 이미 한반도의 남과 북이 쉽게 단일 국가를 건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삶의 방식과 경험세계 및 지향의 차이가 뚜렷하다. 평화정치와 통일정책도 그렇지만 평화·통일교육은 공동체 주민들의 삶과 지향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평화정치야 상대가 주로 북한 정치지도부이기에 잠시나마 한국 사회 주민들의 경험세계와 견해의 다양성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 교육 수행자들에게 주민들은 곧 학습자이기에 삶과 이질성과 지향의 차이 심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성찰을 잘 관찰하고 그것의 함의를 선취해 우리도 '통일은 사실 통다'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강령이나 정치로 하나가 되는 상상을 넘어 더 많은 삶의 다양성들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길에 대한 사유와 토론을 본격적으로 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여는 여러 길들을 모색하고 안내하는 일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생태 위기와 젠더 갈등 및 세대 간 격리가 주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통일과 평화 논의는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비껴갈 수 없다. 민족정체성이나 민족동질성은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 일반과 젠더 이슈에 민감한 여성들, 생태 전환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을 포괄하기 어렵다. 아울러 한반도 남단에 “좀 늦게 도착한” 이주민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도착해 일찍부터 가계를 잇는” 선주민의 관점을 내세운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내세우는 통일 논의에는 배제의 논리가 깔려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남과 북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집단적 민족정체성 강조만으로는 현실로 존재하고 증대하고 있는 분단국 정체성, 즉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겨낼 수 없다. 한반도에 2개의 이질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양 국가의 주민들

사이에서 쉽게 합치기 어려운 지향과 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을 평화·통일교육은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 체제를 무조건 따르자는 말이 아니다. 인습적인 방식으로 남북 간 교류를 통해 민족 공속감이나 동질성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 남북 간 접촉과 교류는 남북 주민들 사이에 공속감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거리감과 이질성도 함께 증대시킨다. 남북연합을 비롯한 한반도 통일 논의는 이제 민족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에 의거하기 보다는 양 국가의 상호 존중과 양 국가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교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집단적 결속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민족 담론이나 통일 당위 주장, 또는 평화 규범이나 변영의 망상만으로는 갖기가 어렵다. 청년과 여성, 이주민 및 생태 전환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당위성을 전제해 남북연합을 이행기로만 보는 관점을 상대화해야 한다. 남북연합을 통해 남과 북의 다양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고 한반도에 더 많은 삶의 다양성들이 펼쳐지는 것이 평화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보호하고 공정히 경합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통일교육은 다원적 지향들이 불필요한 마찰과 대결을 줄이고 서로 만나고 엮힐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다. 평화를 통한 ‘통다’, ‘통다’를 통한 평화의 이중 관점이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에 대한 인습적 교육이 평화를 만날 수 있는 여러 문들을 닫지는 않는지 성찰해야 한다. 통일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은 평화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논의를 축소한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이 통다를 또한 품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통일 한반도는 사실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관점을 세워야 한다.

2. 장밋빛 통일 전망 보다 핏빛 분단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핵심 주제는 늘 북한 이해와 통일 정책이었다.¹⁰ 평화·통일교육이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통일 강령과 남북 관계를 주제로 다룬 교육은 자칫 해당 시기 정부의 통일 정책을 알리고 높이는 길로 전락하기 쉽다. 또는 통일의 장점과 이익을 선전하는 일로 교육은 뒷걸음친다. 전자는 당장의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얽혀 혼란에 빠져들기 쉽고, 후자는 통일 신중론과 회의론에 직면해 통일 규범 강화의 공격적 선동 담론이 되기 쉽다.

안타깝게도 통일교육은 현실 평화정치의 옹호와 통일 미래의 밝은 전망을 그리느라 분단과 적대적 대결의 과거사를 빈번히 놓친다. 2019년 통일부가 발표한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5개 내용에 분단의 고통이나 적대적 대결의 비극적 생애사는 빠져 있다.¹¹ 분단과 전쟁의 핏빛 역사를 빼고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가 놀랄 일이다. 더구나 청년 세대 다수가 전쟁의 파괴와 분단의 고통, 남북 적대의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음을 염두에 두면 그것은 더욱 안타깝다. 미래 통일 전망이 명료하지 않을 때, 현재 평화정치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평화부재의 구체적 고통과 상처를 교육 주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결함을 극복하고자 일부 통일교육 교재나 평화 도서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소개한다.¹²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장기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이산가족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 사회에서 각기 '내부의 적'으로 몰려 박해와 탄압을 받은 사람들, 분단 접경지 주민으로 생활 터전을 군사 시설과 안보 목적을 위해 빼앗긴 사람들, 북으로 납치되었다 남으

10 국립통일교육원 엮음, 『2021 북한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국립통일교육원 엮음, 『2021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11 통일부 엮음,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270쪽.

12 김병로, 『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 성찰과 치유를 위한 이산가족 이야기』 (파주: 아카넷, 2013).

로 내려왔지만 구금과 감시의 고통을 겪은 남북어부들, 해외 동포로서 남북 분단 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 군인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남과 북의 수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들, 남북한 사이의 경계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시도하다 고초를 겪은 분단의 '경계인'들 등 많은 이들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들의 고통과 파괴의 삶을 흘러간 역사로만 여길 수는 없다. 그들의 고통과 비극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형식적인 통일 당위나 남북한 분단 질서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괄해야 한다. 그래야 분단이 무엇인지, 왜 분단 극복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분단극복과 평화는 갈라진 삶을 잇고 망가진 삶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통일교육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거나 배제한 여러 분단 비극의 생애사는 학생들에게 분단 현실을 생생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이 분단의 생애사를 몇 가지 유형과 범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습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맡아야 한다. 분단 비극과 평화부재의 생애사는 학생들에게 평화가 추상적인 규범이나 억지 당위가 아니라 공동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치유와 회복, 화해와 포용의 구체적 과정임을 알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더구나 그 주제는 어떤 다른 주제 보다는도 더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 학습 방법으로도 매우 유익한 장점을 지닌다. 평화·통일교육은 다채로운 삶의 서사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분단 극복의 실천 의지를 복돋을 수 있을 것이다. 무미건조한 '북한 이해'나 규범으로 보이는 '통일문제 이해' 보다는 핏빛 분단의 생애사를 통해 평화 감성을 높이는 더 중요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3.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원칙을 수용하자

평화·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있는 교육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평화교육이든 통일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원칙, 즉 의식화 금지와 논쟁재현 및 학습자 중심 원칙은¹³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정부 통일정책의 홍보나 남북관계 정치의 선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엘리트와 정책담당자들이야 제 선의와 진정성을 내세우겠지만 정책 선전과 홍보를 교육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소동으로부터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명료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권력을 장악한 앞선 세대의 권력엘리트들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제 경험과 전망을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욕망을 가지기 쉽다. 평화와 통일을 내세우면 더욱 공동체 규범과 정치 선전, 장기 전망과 정책 홍보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니 평화·통일교육은 규범과 전망의 맥락에서 다원주의 소통과 학습자의 주체화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화 금지의 원칙을 따른다고 교육자가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거나 ‘중립’을 내세우며 제 견해를 숨기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제 견해를 세우도록 보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에 스스로 학습자들에게 모범 내지 예시를 보이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해야 한다.¹⁴ 보이텔스바흐 합의 두 번째 원칙이자 국제적으로 수용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원칙인 논쟁재현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공공영역의 논

13 심성보 외 공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서울: 북멘토, 2018).

14 논쟁재현과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케르스틴 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위의 책, 101~105쪽; 넬 나딩스, 로리 브룩스 저, 정창우·김윤경 역,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서울: 풀빛, 2017), 30~31쪽 참조.

쟁 대상이거나 주요 갈등 논점은 그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논쟁 재현 원칙’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도 적용해야 한다. 교육자는 의식화가 아닌 방식으로 제 견해를 드러내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요컨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인지와 해석, 평화에 대한 입장 차이, 통일 구상과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토론해야 한다. 북한 체제와 정치, 사회와 현실에 대한 이질적인 정보와 지식 및 견해와 입장들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집이나 교재에 적절히 소개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여러 쟁점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견들도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자 주제로 등장해야지 일방적 훈육 방식의 완성된 지식체계로 등장해서는 안된다.

논쟁의 주제와 대상이 북한이나 통일, 또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평화 관련 여러 쟁점으로 넓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하다. 사드나 종전선언도 당연히 논쟁이나 토론의 주제로 매우 좋다. 왜냐하면 정치와 사회에서 격렬히 논쟁 중인 주제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이 때 단순히 찬반의 대결 형식을 띠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찬성과 반대로 이분화 되는 방식의 토론은 피하는 것이 더 낫다. 혹시라도 찬반 토론을 진행할 때에도 교차식을 적용해 찬성 입장에서 숙고하고 견해를 세우다가 다시 반대 입장에서 사고하고 주장하는 방식을 교차로 경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찬반을 넘는 제3의 대안도 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정 유보와 견해의 전이도 환영할 수 있다. 어쨌든 가능한 여러 방식의 상생적이고 발견적인 방식의 토론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경기평화교육센터가 2020년 펴낸 『교실에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24가지 방법』은 남북의 차이나 통일 강령을 알아가는 여러 흥미로운 방식과 다양한 토론 형식을 제시했다. 그것은 게임이나 카드 맞추기, 화백회의나 협상게임 등 유익한 토론 방식과 견해 형성 방법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성과다. 다만 그것도 논쟁을 위한 자료나 방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¹⁵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관련 쟁점들에 대한 여러 이질적이고 갈리는 견해들에 대해 논쟁적으로 토론하도록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토론과 논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주체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토론과 논쟁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문화와 정치문화의 발전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제 견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자가 그것을 위한 준비와 계획을 잘 갖추어야 한다. 학교 교사들이나 평화교육 수행자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워크숍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통일교육 수행의 핵심 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과 교육청은 인습적인 통일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평화와 통일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통한 대화식 상호학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바꾸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교육 방식과 형식, 교육 내용과 자료, 교육자의 역량과 준비 방식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교육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¹⁶ 실험하고 실패하면서도

15 그 책에 소개된 '신호등 토론'은 그나마 논쟁적인 토론을 통한 견해 형성을 보조하는 유익한 방식이다. 신호등 토론은 학생 한 명당 네 장의 카드를 받은 뒤 남북이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빨강(전쟁), 노랑(흡수), 초록(협력), 파랑(분단유지) 카드로 제 입장을 표현하도록 한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칠판에 각 색들의 장단점을 적고, 질문과 답이 충분히 오가도록 만든다. 그 뒤 학생들은 제 카드를 바꿀 시간을 갖는다. 처음 선택한 카드와 생각이 달라졌다면 다른 카드로 바꿀 수 있고, 최종적으로 카드 선택 후 반 전체 카드를 확인해 결과를 확인한다. 김세진 외 공저, 『교실에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24가지 방법』 (안산: 한결하늘, 2020), 126~133쪽.

16 사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방식의 기본 전제는 교육 공간의 변화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세히 다루지는 못한다. 학습자들이 일렬로 앉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앉아 전면에 높은 자리에 위치한 강사를 보는 인습적인 강의실은 애초부터 토론과 논쟁을 제한한다. 평화교육은 권위나 일방성을 줄이는 방식의 교육 공간 배치에서 출발한다. 현재 각종 평화·통일교육의 현장, 즉 교육 공간과 배치에 대한 조사와 갱신에 대해서도 진중히 토론하고 대안 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공간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동기,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 『기억과 전망』 40호 (2019), 310쪽 참조.

작지만 빛나는 성취들을 모아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4. 비평화 교육 및 문화와의 대결이 전제다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 개방적 토론이 모든 견해와 입장의 인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투적 반공주의와 북한 혐오를 ‘논쟁재현’ 가능한 하나의 견해로 수용할지 아니면 평화를 파괴하고 교란하는 입장으로 보고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지를 따져야 한다. 핵무장과 인권유린을 근거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남북 간의 적대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치 엘리트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 평화와 화해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을 망각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도 평화교육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평화의 준칙을 세워도 평화부재에 책임 있는 상대 국가의 정치와 지배엘리트를 비판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다만 그 비판의 방식과 과정, 언어와 내용이 평화와 화해를 교란하거나 방해해서는 곤란하다. 평화의 상대국에 대한 규범적 비판은 그것에 대한 전투적 비평화적 공세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식으로 비판’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투적 반공주의에 물들어 적대와 혐오를 무기로 북한을 규탄하고 악마화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교란할 뿐이다. 그런 견해와 주장을 평화교육에서 ‘논쟁재현’의 한 입장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논쟁재현’에도 결국 경계는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런 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평화교육의 원칙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견해를 민주시민교육의 다원주의가 용납할 수는 없다. 평화를 교란

17 이동기,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 시민교육』, 77-78쪽; 이동기, 『현대사 몽타주』 (따주: 돌베개, 2018), 413쪽.

하고 비평화를 선동하는 견해를 평화교육의 다원주의가 수용할 수는 없다.

요컨대 평화교육은 한편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견해와 입장 차이를 존중하고 논쟁을 통해 다양성 존중과 공생을 익히도록 보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와 혐오를 거름으로 삼은 비평화 교육 및 문화에 맞서야 한다. 평화교육의 실천은 먼저 비평화 교육과 대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평화는 평화 '상태'에 대한 이상적 망상이 아니라 비평화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평화교육과 단절하고 그것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평화·통일교육은 그저 알리바이나 정치 연극에 불과하다.

전투적 반공주의와 북한을 겨냥한 적대성과 혐오만을 키운 안보교육이 여전히 평화교육의 일부로 행세하고 있다. 평화적 남북 관계의 발전을 막는 장애들, 즉 적대적 타자 이미지, 군사주의, 상호 불신과 공포, 군비경쟁 정당화 등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비평화 교육과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난 시기 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 및 사회문화에서 군사주의나 전투적 반공주의를 강화한 예들을 살펴 평화교육의 한 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북한 양자가 상대를 적이나 악으로 규정하며 왜곡된 정보와 적대적 타자 이미지를 조작한 실례들을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1986년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맞서 당시 한국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장해 건설한 평화의 댐 건설사업과 이어진 북한 적대화 정책과 교육은 평화교육에서 적극 다루어야 할 반성적 교육 주제다.¹⁸ 북한을 악마화하며 이루어진 지난 시기 안보정책과 안보교육을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로 삼아 북한 적대화 의식의 근간을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타자상 생산과 유포의 근본 기제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전

18 권기봉 외 공저, 『대한민국 평화기행』(서울: 창비교육, 2021), 90-92쪽.

쟁을 통한 통일 주장, 북한 붕괴의 외부 촉진 옹호 주장, 북한 주민에 대한 혐오나 조롱 등은 다원주의 논쟁의 영역에 수용될 수 없다.

교실이나 학습 현장에서 그런 비평화 주장을 내걸고 다원주의 토론 기회를 요구하는 이들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교육자가 갖추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과 교육청은 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통일부와 교육부의 통일교육 전담 기관과 책임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떠올리는 방식의 통일과 북한 이해 교재들이나 가치나 규범의 선한 말로만 채워진 각종 지침서들을 매년 생산하는 방식을 버리고¹⁹, 쟁점에 대해 더 민감하고 평화파괴 선동들을 분석하고 핵파 논거들을 마련해 보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및 공생의 경계를 넘어간 전쟁과 혐오 선동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핵파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 수행자들을 보조하고 보호하는 자료와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나 역사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과거사 부인 흐름으로 교육 현장이 교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일은 이미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등장하는 각종 평화 파괴 선동과 적대성 강화 논리들을 조목조목 따져 대응하고 분쇄하는 교육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문제로 등장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평화 관점의 대항과 대안 논리들을 교육자들이 자기화해서 학습자들을 비평화 선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다원주의 관점의 이견들이 더 많이 생기며 토론과 논쟁을 통한 정치적 주체화의 다양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북한을 수동적 존재로 상정하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도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와 소통하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삼는 평화교육에 충분히 조용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인 이점과 주민 삶의 기회 확대 가능성을

19 국립통일교육원은 매년 동일한 제목과 주제로 통일교육 내용을 교재 형식으로 발간하는데, 주제와 내용 및 서술의 중복이 심하다. 주제와 구성, 내용과 서술 모두에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알리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미쁘다. 하지만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과의 상생 지향적이고 상호적인 관점이 배제된 일방적인 통일 선전 미사여구는 오히려 평화 정착과 관련한 과제와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각종 통일 주장들, 특히 권력자들의 통일을 내세운 장밋빛 선전 정책을 비판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평을 열어줘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적대적 타자상 뿐만 아니라 타자의 일방적 대상화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5. '비판' 평화답사가 필요하다

역사의 특정 장소와 공간, 건물과 사물은 이미 그 자체로 말을 한다. 교실이나 실내 강의실에서 문자로 된 교재나 학습 자료를 읽는 것 보다는 역사성을 지닌 장소와 공간, 건물과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다. 모든 학습자에게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렇다. 실내 교육 공간에서 문자 텍스트를 활용하는 교육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역사 현장 답사는 더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사의 비극과 공동체의 집단적 역사 경험을 공공역사와 기억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큰 문화 흐름이 등장했다.²⁰ 기념박물관과 역사조형물 건립이 성황을 맞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파괴의 현장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도 각광받는다. 야외박물관 또는 현장답사 프로그램도 여기저기서 마련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도 그 기회와 방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평화답사지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당연히 DMZ와 접경지다. 이를테면, 경기 북부지역 도시들, 즉 연천, 포천, 김포, 파주 등과 강원지역의 접경지들, 고

20 공공역사와 기억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마르틴 루케, 이름가르트 힌드로프 저,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서울: 푸른역사, 2020), 29~50쪽; 이동기, 『현대사 몽타주』, 352~383쪽; 이동기,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호 (2016), 119~142쪽 참조.

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은 각기 이미 다양한 평화답사지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평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 때 접경지의 군사적 성격뿐만 아니라 생태적 특성에도 주목해 평화답사를 생태 관점으로 보충한 여러 답사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²¹ 평화·통일교육은 기왕의 접경지 답사 프로그램을 수용해 학습자에 맞게 조정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2019년부터 동해평화학교와 동해평화로, 강원평화로 등의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생들을 위한 정례 평화답사 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²² 평화·통일교육 기관과 단위들은 서로 협력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환해서 평화답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기왕의 안보관광을 평화답사로 전환하는 거대한 평화문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평화’답사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다. DMZ와 접경지 곳곳에 놓여 있는 과거 대결의 흔적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군사 대결과 위협의 흔적은 안보가 평화를 대신할 수 없음을 더욱 부각한다. 아울러 그 동안 안보관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적대성 강화와 비평화 대결의식 심화는 이제 평화답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접경지 평화답사의 경우는 그런 전망과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과 관련해 안보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회피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아 마땅하다.

둘째, 평화답사는 접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체

21 강민조 외 공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I』 (세종: 국토연구원, 2021).

22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엮음, 「제2회 동해평화학교」 (2021);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엮음, 「제3회 동해 평화로」 (2021).

제로 한반도는 많은 지역에서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다. 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고통을 삶과 죽음으로 겪은 주민들도 도처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렇기에 평화답사는 분단 접경지나 DMZ를 넘어 각 지역의 역사 현장을 활용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기획하고 김진환과 한모니까 교수 등이 집필한 『대한민국 평화기행』²³은 매우 인상적인 노력이다. 이 책은 위의 두 과제를 잘 수행한 의미있는 성과다. 특히 그것은 기존 DMZ나 접경지 중심의 답사지를 전국의 주요 근현대사 유적지와 연결시키고 그 연관성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²⁴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기억과 장소, 마음으로 돌아보는 평화』²⁵도 매우 유익하다. 두 책은 학교나 대학 및 여러 교육기관의 평화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가득하다.

하지만 위 두 책의 글들은 대부분 현재의 기념시설과 기억문화에 대해 비판과 성찰이 부족하다. 두 책이 소개하는 많은 기념관과 박물관, 역사 유적지와 조형물들은 결합과 문제 투성이다. 평화 형성과 자극 제공과는 무관한 곳이 적지 않다. 심지어 평화 규범과 관점을 반영한 것처럼 보여도 전시 내용이나 재현 방식, 조형 예술 등의 아마추어리즘과 조악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탄성과 헛웃음을 부르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역사와 다원주의 관점의 소통

23 권기봉 외 공저, 『대한민국 평화기행』.

24 김진환 교수는 『대한민국 평화기행』 서문에서 “DMZ 일원이 아닌 장소여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의미를 찾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립운동 유적지를 평화·통일 현장체험답사지로 끌어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체제 맥락의 국가폭력과 남북간 적대적 대결 현장을 더 많이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그 책의 3부는 충청과 호남을 다루면서 신채호와 유관순, 이동녕의 유적지를 잘 소개했지만 충북 영동의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 유적지 등을 빼버렸다. 아쉬운 대목이다.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평화교육 답사지로 성급히 확대하기보다는 한국전쟁과 분단 대결, 국가폭력 및 평화정치와 평화운동의 여러 역사와 유적지를 더 많이 연구하고 정리해서 평화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25 김성민 외 공저, 『기억과 장소-마음으로 돌아보는 평화』 (서울: 씽크스마트, 2021).

과 전문성 제고, 생애사나 로컬 맥락의 구체성 반영, 전시 기술과 조형 예술의 최신 기술 활용 등의 면에서 비판적으로 따질 대목이 넘친다. 학생이나 학습자들을 그런 형편없는 전시나 기념 시설에 데려와 일방적인 전시 안내나 장소 시설 설명을 매개하고는 비판적 토론이나 건설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훈육과 주입 내지 일방적인 교육에 다름 아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한국전쟁의 비극과 분단 대결의 고통과 주민들의 상처가 공공영역과 문화적 기억에서 더욱 주변화되고 있다. 반공주의 안보교육은 적대적 타자상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 외에도 열전과 냉전, 분단과 적대의 여러 상처와 고통을 일면화하는 문제를 낳았다. 전쟁과 분단의 희생과 피해의 인정 대상을 제한했기에 외면되거나 억압되었던 폭력 피해와 분단 적대의 희생은 기념이나 기억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 한국전쟁이나 분단 대결의 역사유적지와 조형물, 기념관과 박물관이 넘치지만 대개 ‘호국’이나 전쟁영웅, 반공주의 선전이나 군사주의 조장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을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관점과 내용,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쟁, 조정과 수용 과정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의 수행자들이 그것을 적극 발의하고 준비하는데 주역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평화·통일교육은 현재의 공공역사와 기억문화에 나타난 역사 재현과 매개 결과들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발전시켜 그것의 혁신과 전환 과정을 동반하고 보조할 수 있다. 평화답사는 장소나 공간의 성격과 전시 내용만이 아니라 답사의 형식과 방법에서도 비판과 성찰을 보장해야 한다. 즉 ‘비판’ 평화답사여야 한다. 그것을 통해 평화답사지의 갱신과 전환에 학습자들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갖게 된다. 기념관과 박물관에서 안내 문구나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특정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주입하는 일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안내와 설명은 학습자들이 특정 정답과 미리 정해진 감정을 얻어 가도록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과 관심을 얻도록 보조하는

장치여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방문객들은 감정의 커뮤니티를 경험한다.

평화교육은 바로 그런 답사를 통해 폭력과 전쟁, 인간적 고통과 주민들의 찢겨진 삶의 현장이 지닌 진본성(authenticity)과 아우라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역사의 진본성은 역사 현장이나 사물이 고유하고 특별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근원적이고 순수하며, 진실하고 충실한 인지와 경험 계기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²⁶ 평화답사는 역사 진본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억지나 가짜 감정이 아니라 낯선 경험을 통한 진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한다. 과잉 예술 재현과 복제와 모방으로 인한 사실성의 상실 보다는 역사 진본성에 기초해 장소와 공간, 건물과 사물이 지닌 흔적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 평화답사지에서 각종 모조와 재현을 통해 통일과 평화의 의지나 벽찬 민족 감정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문객들은 대개 진본성을 통해 “뭔가 이상”하며 “안타까운” 느낌을 절로 갖는다. 진본성의 아우라에 근거할 때 비로소 “아니, 정말 말도 안돼”, “헛 참, 어찌다가”라는 탄성들이 생겨난다. 평화교육은 그런 감정과 정서가 평화부재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안내해야 한다. 즉 평화답사를 통해 다시 훈육식 의식화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역사 현장이 주는 무게를 견디며 감각의 경험과 감정의 동요를 가지도록 안내하며 그것을 통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매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건립되고 조성될 여러 평화 관련 기념관과 답사지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은 요구와 견해, 관점과 입장을 표명해 건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관료들이나 그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일부 연구자들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건립은 민주주의에도 평화에도 조응하지 않는다.

²⁶ 역사의 진본성(authenticity: ‘사실성’으로 옮기기도 한다) 개념에 대해서는 이동기,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 297~298쪽

평화답사는 비판과 참여를 통해서 해당 답사지의 내용과 방식의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포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평화·통일교육의 현장 답사는 ‘비판’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현장탐방, 또는 심지어 아예 평화답사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역사 유적지나 기념관 방문이 옛 반공주의나 국가안보를 내세운 전시와 기괴한 조형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억지 감동을 전달받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선의 정도는 가진 소수의 행정 관료와 자칭 문화엘리트들의 조악한 ‘평화’ 참칭 기념관을 둘러보며 그것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에 “한 번은 와 볼만해”라고 위로하는 기만극을 중단해야 한다. 그들의 오만함과 게으름을 함께 비판해야 한다. 장소와 공간을 통한 과거의 현재화, 즉 역사 기념관과 조형물들이 평화의 의미와 함의에 조응하는지 아닌지도 따져 그렇지 못한 답사지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오히려 개선과 변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은 참여를 낳고, 참여는 소통을 이끈다. 그렇게 ‘비판’ 평화답사는 평화문화 형성의 계기이자 과정일 수 있다. 교실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학습자를 정해진 교육 내용의 수동적 대상으로 만드는 모든 방식으로부터 이별해야 한다. 그 앞에는 더 많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 상호지향의 교육 방식이 널려있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건설적 방법론을 수용해 위의 여러 관점과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평화사상가이자 교육철학자인 루소를 외롭게 두지 말자, 서두에서 인용한 그의 말을 보태면, 교육이 평화를 보조하려면, 그 평화는 교육 자체에서 생겨나야 한다. 자, 평화·통일교육 수행자들이여, 코로나19로 캄캄해진 밤하늘에 평화의 별들을 띄우자. 평화 또한 역병만큼 전염이 강함을 믿자!

참고문헌

- 강민조 외 공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I』, 세종: 국토연구원, 2021.
- 강원도교육청 엮음,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 실현을 위한 2020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춘천: 강원도교육청, 2020.
- 경기도교육청 엮음, 『평화·통일 활성화 계획』, 수원: 경기도교육청, 2020.
- 국립통일교육원 엮음, 『2021 북한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 국립통일교육원 엮음, 『2021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 권기봉 외 공저, 『대한민국 평화기행』, 서울: 창비교육, 2021.
- 김병로, 『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 성찰과 치유를 위한 이산가족 이야기』, 파주: 아카넷, 2013.
- 김병연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서울: 교육부, 2019.
- 김상범 외 공저,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김성민 외 공저, 『기억과 장소-마음으로 돌아보는 평화』, 서울: 씽크스마트, 2021.
- 김세진 외 공저, 『교실에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24가지 방법』, 안산: 한결하늘, 2020.
- 문아영·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9.
- 이대훈,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서울: 피스모모, 2016.
- 이동기, 『세계시민 관점의 평화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한국 세계시민 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서울: 살림터, 2020.
- 이동기,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최소합의'로 갈등 극복하기』,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8.
- 이동기, 『현대사 몽타주』, 파주: 돌베개, 2018.
-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통일교육원 엮음,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통일부 엮음,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 넬 나딩스, 로리 브룩스 저, 정창우·김윤경 역,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서울: 풀빛, 2017.
- 마르틴 뤼케, 이름가르트 친드르프 저,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20.
- 케르스틴 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심성보 외 공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8.

Judith C. Enders, and Kollmorgen Raj eds., *Deutschland ist eins: vieles: Bilanz und Perspektiven von Transformation und Vereinigung*, Frankfurt am Main: Campus, 2021.

Sabrwo, Matin and Saupe, Achim ed., *Historische Authentizität*, Göttingen: Wallstein, 2016.

강순원, 「한반도 분단극복 평화교 육으로서 통일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의 조율」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4권 1호 (2019).

이동기,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31호 (2016).

이동기,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 『기억과 전망』 40호 (2019).

이슬기,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탈분단 담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5호 (2019).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제2회 동해평화학교」 (2021).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제3회 동해 평화로」 (2021).

교육부,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2018).

이슈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 이정철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I. 글로벌 변동기 한국 외교¹

미중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실 미국은 3C 정책이라며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 과정에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 그리고 대결(Confrontation) 정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냉전의 의도성을 부인한다. 반면 중국은 대결과 협력이 공존한다는 레토릭 자체가 불순하다며 반발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익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도 협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1월 15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사용한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타죽는다”라는 강경 표현에 주목해 회담 실패론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패론은 회담 이후 번지는

¹ 본 글은 필자가 토론회에서 사용한 원고를 교육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다. 본 파트는 경향신문 2021년 11월 23일자 필자의 칼럼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론을 예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에 대해 기존의 방침에서 후퇴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미중경쟁관계가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런 리커플링 과정이어서 냉전론을 부인하는 시각이 많다. 반면 대부분의 국방 관련 인사들은 가장 격렬하게 미중간 신냉전을 예고한다. 강대국 정치의 여러 현상의 어느 경험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 각자의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자연스럽다.

한 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내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자 전 지구적으로 미국의 동맹마저 민주당 동맹과 공화당 동맹으로 나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achel Myrick).²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중산층 중심의 외교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계승하고 있는 것 같다(Richard Haass).³ 특히 중국 위협론에서 미국의 초당적 외교론은 더욱 강력해 미·중 간 전략 경쟁을 국제 질서의 근본 구조로 보는 시각이 대세이다.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내리막길론이 워싱턴에 여전한 이유이다.(M. Green, 중앙일보, 2021.11.19)

그렇지만 잠시 눈을 돌려보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메르켈의 독일은 한 때 미국과 거의 결별 수준까지 갔다는 평가가 나돌았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트럼프와 메르켈이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고 미국의 유럽 동맹에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 독일은 사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논의가 진행 중이고 독일과 미국 모두 동맹을 대하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두고 눈치 싸움이 한창이겠다. 프랑스는 오키스(AUKUS) 동맹으로 화가

2 Myrick, Rachel, "America Is Back, but for How Long? -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End of U.S. Credibility" *Foreign Affairs*, (June 14, 2021).

3 Haass, Richard, "The Age of America First-Washington's Flawed New Foreign Policy Consensu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단단히 났다. 문정인 세종 연구소 이사장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호주-영국-미국 즉 앵글로 색슨 동맹이 미국의 성골 동맹이고 파이프 아이즈의 성원인 캐나다, 뉴질랜드가 진골 동맹이라면 기타 유럽 동맹이나 한미, 미일 동맹은 육두품이라는 비아냥이 있다.(문정인, 한겨레칼럼, 10.10) 육두품으로 분류되는 동맹들이 갖게 될 상실감이 어떤 나비효과를 낳을지는 당분간 글로벌 외교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건 아프칸 철군 건이었다. 오랜만에 드러난 바이든 표 철군 외교는 준비 부족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못매를 맞았다. 이는 미중간 전략 경쟁이 국제 질서의 근본 구조이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중심이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협소하고 또한 위험한 시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제 한반도로 돌아오자. 2019년 여름 일본의 느닷없는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한국 외교의 기초를 흔들었다. 2020년 1월에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마스크 대란을 겪었고 2021년 봄엔 백신 부족으로 또 한 번 서러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은 요소수 사태로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안보 요인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동맹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측 범주 밖에 있는 이슈가 쓰나미로 몰려올 때 얼마나 탄력적(resilient)일 수 있는가 하는 비상대응능력(disaster relief)이 동맹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미중관계의 미래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미중 리스크는 상수가 된 지 오래이다. 낙관도 비관도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외교는 국방이 아니다. 덤즈데이 시나리오가 출발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교는 또한 행정 이 아니다. 행정은 정상과 제도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외교는 비상식과 결단의 영역에서 빛을 발한다. 지금 글로벌 K-시리즈는 경제·통상·문화·외교 전 영역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비상대응능력을 이만큼 키워온 우리

외교가 다시 미중 대결구조론에 휘둘리는 왜소증에 빠져들 이유는 없다. 동맹 몰입외교의 보상 심리에 매달리거나 방기(abandonment)의 우려에 빠져 동맹의 발목이나 잡는 국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따라서 미중관계에 대한 과잉대응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아직은 불필요한 대응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맞추어 한국의 갈 길을 가면서 우리의 비상대응 능력을 고양시키면 된다는 뜻이다.

II.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문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에서 심중에 남아있던 모든 열정을 담아 평화의 불씨를 지핀 이래 종전 논의가 되살아났다. 게다가 대통령이 교황 면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위한 바티칸 순방 외교에 나서는 등 종전선언을 향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미 간에 종전선언 합의문을 담은 초안이 만들어졌었다고 폭로했다. 볼턴은 식스 피엠 문안(six p.m. text)이라 불리는 장문의 합의문을 자신이 주도하여 밤새 뒤집었다고 자랑한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합의안에 추가할 것을 강변하여 장문의 합의안을 난도질했다는 것이다. 결국 주지하다시피 최종 합의안은 종전선언 안이 모두 빠진 속 빈 강정 같은 합의문(short statement)이 되었다고 안도한다. 볼턴의 공과를 별론으로 한다면, 분명한 점은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 초안이 있었음이다.

4 본 파트는 경향신문 2021년 10월 26일자 필자의 칼럼을 수정하였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르면 한미간에 합의한 종전선언 초안은 당시 합의안에 하나의 구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2021.11.23.)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합의안은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핵심 선언에 더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종전선언이 자칫 정전체제를 부정하고 유엔사 해체론으로 이어져 일본의 안보 불안이나 한미일 3각 협력 기조를 흔들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일본 측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은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결합고리가 약화될까 전전긍긍하는 기색이고 지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교토통신 2021.11.6)

어쨌든 한반도 상황에서 현재의 종전선언은 북미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자 향후 평화프로세스의 플랫폼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평화협정과 같은 실체가 없으니 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끌어낼 이유가 없다. 남북미중 4개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촉매제로 종전선언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모멘텀으로 될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완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매우 유효한 내용으로 평가되었다.(WP 2021.4.30)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nothing for nothing)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everything for everything) 빅딜(big deal)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의 포지셔닝(something in the middle) 전략을 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미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신 때문에 실무

회담의 시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몇가지 요구 사항을 구두로라도 약속할 것을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기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대국의 위신상 그런 조건을 먼저 약속하는 회담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종전선언은 대화를 매개하는 하나의 촉매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종전선언 논의 속에 담아 교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미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모멘텀으로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너무 무겁게 다루기 보다는 그것을 보다 가볍게 다루어 합의 가능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통일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그것을 굳이 베이징 올림픽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고 정상간 종전선언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일이 되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이다.

Ⅲ. 북한의 대남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⁵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강대강, 선대선(power to power, good will to good will)>의 원칙을 내세우며 국방-외교 병행론을 거론하였다. 연설에서는 핵무기 고도화, 핵무기 증강 계획을 밝히고 다탄두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핵잠수함, SLBM, 군사정찰위성, 각종 전술핵무기 등을 언급하여 국방력 강화 기조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이어진 열병식에서도 북극성 5호 등 비대칭 무기 체계의 일부를 공개하여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특히 전술 핵무기를 강조한 대목에서는 실전 배치 여부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

⁵ 본 파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할 연구총서 중 필자의 글인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대남 정책 전망”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용이다.

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며 대미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6월의 제7기 3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설에서도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같은 이중적 태도는 대남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이후의 강경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화론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현 상황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새 출발점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2021년 7월에는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을 통해 군통신선을 연결했다가도 한미군사연습을 빌미로 또 무단으로 두절시키기도 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중적 태도이다.

위협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론을 북한식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전략이라고 본다면, 왜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놓고 그 구체적 상을 공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제약 조건이다. 초유의 미-중 갈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제약 조건 하에서 북한이 선불리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둘째, 기회 요인이다. 한국의 정치 일정이 복잡해져 가고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오는 조건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가오는 기회를 스스로 봉쇄할 이유가 없다. 전략적 모호성은 기회 포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셋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초유의 봉쇄형 방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새로운 전략들을 유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제재 공방 때문에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도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우리의 평가를 웃도는 내구력을 확보한 듯 보인다. 북한을 압도하고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중국은 미중갈등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도리어 북중동맹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받는 친서는 우리의 비공개 친서보다 공식적이고 화려하다. 북중동맹이라는 뒷배가 있는 한 제재로 북한을 관리하기란 기대 난망이다. 코로나 봉쇄 상황이 북한을 무릎 꿇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봉쇄를 단행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IV. 결

지금처럼 남북관계의 대화 단절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북중관계가 더욱 공고화된다면 북한은 냉전의 섬으로 남기보다는 중국의 맹방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포기하고 북중동맹으로 갔다는 두 개 한국론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미래를 만든 건 철옹성같은 대북 제재 체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 들을 때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북한이 대남 정책을 그렇게 수립했다는 평가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그들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언제까지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종전선언은 그 점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한미가 애써 만든 종전선언 안이 이같은 동아시아국제정치의 맥락에 부합

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이 이미 두 개 한국론과 북중동맹론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냉소보다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노력에 동의를 보낸다. 남은 시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을 한미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본다.(본 글은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글임.)

참고문헌

Haass, Richard: “The Age of America First—Washington’s Flawed New Foreign Policy Consensu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Myrick, Rachel: “America Is Back, but for How Long? –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End of U.S. Credibility”, *Foreign Affairs*, June 14, 2021.

리뷰

평화와 통일의 현장은 우리 곁에 있다 • 홍석률

독일 한인이주여성, 그녀들에게 열정을 배우다! • 박인옥



평화와 통일의 현장은 우리 곁에 있다

서평: 권기봉, 김진환, 한모니까 지음, 『대한민국 평화기행』(창비교육, 2021)

●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이 책의 저자들은 책을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을 서문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평화·통일 교육을 하다보면 현장체험학습도 필요한데, “좀 더 다양하고 가까운 현장체험학습지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것이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질곡을 보여주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근처, 남북의 접경지역을 떠올린다. 그러나 영남, 호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매우 멀다. 가까이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의 접경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용의치 않다.

분단과 전쟁의 흔적은 남북을 가로지른 휴전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분단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정전상태에서 이를 장기지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 즉 외세의 개입과 저항, 좌우 이념갈등,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체제경쟁, 억압적인 국가폭력, 근대의 불균등한 세계질서와 한국의 관계 등

등을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은 전국에 널려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I.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전국 투어

평화와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전국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이 책은 강화도로부터 시작한다. 탁월한 선택이고, 기획이다. 강화도는 고려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요충지이자 왕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강화도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화도는 한국에서 근대의 입구라 할 것이다. 근대문명은 유럽에서부터 발흥하여 제국주의/식민지 세계질서 속에서 강화도를 통해 한반도에 밀어닥쳤다.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있었고, 1876년 일본의 무력시위 속에서 조선이 개항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식민의 세계질서가 동서 양진영의 냉전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단되고 전쟁이 발생하였다. 식민지화와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일그러진 근대가 만들어지는 데 그 입구 역할을 한 것이 강화도이다.

그런데 이 책의 강화도 항목 서술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등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섬에 워낙 많은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인지 충분히 설명되고 강조되지 않은 느낌이다. 또한 평화통일 하면 떠오르는 인물, 1950년대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강화도가 고향이고, 여기서 많은 활동을 했다. 조봉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쉽다. 물론 조봉암의 경우 관련 유적지가 없어 딱히 방문할 곳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화도 지역을 개관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 책의 항목 서술은 강화도에서 시작되어 인천을 거쳐 김포, 파주, 연천

등 경기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으로 가고, 이어서 철원, 양구, 화천, 강릉, 속초, 고성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접경지역으로 간다. 접경지대를 돌고 난 후 서울로 돌아오며, 이후 충청, 호남 지역으로 가고, 부산, 대구와 영남지역을 돌아 제주도에서 마무리된다. 제주도에 대한 서술은 4.3항쟁 등 이 섬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며 역사적 화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강화도에서 시작되어 제주도에 끝나고, 접경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 후방지역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서술 항목의 순서와 배치는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같아 보이며, 이 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제주도 관련 서술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데 핵심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를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II. 식민지화와 분단의 관계

이 책의 서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근현대 유적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며,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지만, 김구, 유관순, 이상룡 등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장소들을 특별히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불러일으킨 제국/식민의 세계질서와 분단을 발생시킨 냉전질서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보고, 이러한 근대적 세계질서가 불러일으킨 폭력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서로 연결시켜 보려는 의도인 것 같다.

식민지 지배 문제를 분단문제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 책에 나름대로 설명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과 한국의 식민지화가 민족분단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166쪽). 또한 천안 독립기념관을 서술하며, 동양평화 및 세계평화를 위해 제국주의 타도와 한국의 독립을 강조했던 독립운

동가들의 어록이 나열된다(203쪽).

최근 냉전사 연구에서는 제3세계에서 탈식민의 문제와 냉전이 결합되는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식민지화와 분단 모두 불균등하고 폭력적이었던 근대 세계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대부분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온 대표들은 “최종 의정서”에서 “식민주의는 조속히 종식되어야만 하는 악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유와 평화는 상호의존적이다. 자결의 권리는 모든 인민들이 향유해야 하며 자유와 독립은 아직까지 종속된 상태의 인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주어져야 한다. 진실로, 모든 국민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되게,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와 그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이동기,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111쪽).

과거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연대와 평화운동은 식민지로 부터의 독립과 민족자결을 강조하고, 동시에 중립주의, 비동맹주의 등 탈냉전 을 지향하였다. 한국의 평화·통일운동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유적지가 평화기행에서 강조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식민지화와 분단의 관계, 탈식민과 탈냉전 및 탈분단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소략하고 선언적인 느낌이다. 제국/식민의 질서와 냉전/분단 질서 사이의 관계,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이 책은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장소를 강조하지만, 평화/통일운동 관련 인물과 장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화도를 이야기

하며 조봉암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북한산 지역을 설명하며, 이 지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소개했지만, 같은 강북구 지역에 있는 통일운동가 문익환의 자택(‘통일의 집’)과 현대 한국의 대표적 인 평화사상가라 할 수 있는 함석헌의 자택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Ⅲ. 무궁무진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장소들

이 책이 소개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근현대 관련 유적, 특히 독립운동 관계 유적지가 비중 있게 소개되고, 비무장지대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각종 근현대사를 다룬 박물관들, 묘지 등 등이 언급된다. 또한 양구에 있는 DMZ 자생식물원도 다루었기 때문에, 식물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며 현장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놀랄 정도이다.

국내 외를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답사하고 설명해주는 기행문들은 대단히 많다. 이 책은 이러한 기행문 중에 전국에 걸쳐 한국 근현대사 관련 유적지를 가장 많이, 다양하게 알려주는 기행문이라 생각된다. 권기봉, 김진환, 한모니까 3인이 분담하여 서술한 공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장소들을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공저자 3인도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권기봉은 많은 기행문을 쓴 작가이다. 김진환은 북한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자이고, 한모니까는 분단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다. 3인 공저자는 매우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3인이 각기 항목을 맡아 집필했는데, 기본적인 틀과 서술 방식에서는 일정한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쓴 항목들이 비교적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마다 그것을 쓴 필자의 개성도 드러난다.

또한 이 책은 다른 기행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DMZ에 산재해 있는 전망대에도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식민지역사박물관 및 근현대사기념관, 목포 근대역사관들, 부산 백산기념관 및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제주 4.3평화기념관 등의 근현대 관련 역사박물관을 많이 다루고 있다. 최근 근현대사 관련 역사박물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최근 많이 설립되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근현대사 박물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박물관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다룬 박물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주 오래된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 자체가 미적 가치가 뛰어나거나, 아주 오래되었기에 희소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전시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관람객이 비교적 쉽게 그 의미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제대로 설명되고, 효과적으로 전시되지 않는다면 관람자가 그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들은 편차가 있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도 비판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천안 독립기념관의 경우 19세기말 제국/식민 질서의 형성과 특징을 설명해주는 전시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왜 정당하고,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해주기 어렵다.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전시가 진행되는 느낌이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290쪽)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진을 벽면 가득히 채우며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피해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누구의 사진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피해자'로 뭉뚱그려 익명화되는 방식은 강제동원이 피해자 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고통은 어떠한지를 관람객으로 하여

금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박물관 같은 전시시설을 기행문에서 소개할 때에는 전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비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원도 고성 지역을 설명하면서도, 이 책의 내용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DMZ 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IV.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민지화와 분단은 엄청난 폭력을 유발하였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불러일으켰다. 평화는 단지 전쟁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평화라 할 수 있다. 전쟁을 포함한 학살이나 고문 등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비롯하여, 억압과 착취 같은 구조적 폭력, 편견과 차별 등 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들이 모두 거론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여순사건, 4.3사건을 다루고, 진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인 형평운동도 평화의 관점에서 다룬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일제시기 역사를 다룬 역사박물관들 중 상당수가 일제 당국이 자행한 고문 등을 인형 등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고문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날 것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폭력의 문제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문제와 함께, '가해'의 문제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단지 가해자들에 대해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 방문지 제주도에서 이 책은 화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재수의

난’ 또는 ‘신축교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1901년 제주 민란을 다루면서 최근 이 지역 천주교 교단과 주민들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언급한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사 중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한 부분을 길게 인용하며, 진상규명과 사죄, 그리고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전쟁과 분단의 문제점, 그 속에서 벌어진 폭력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벌어진 각종 평화운동, 통일운동, 또한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장소와 현장들이 좀 더 발굴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전국을 골고루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화기행을 위해 선정한 각종 시설 및 장소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평화기행에 관련된 저작들이 더 많이 나오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분단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논의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첫걸음을 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 한인이주여성, 그녀들에게 열정을 배우다!

서평: 김영순, 최승은, 정경희, 정진헌 지음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북코리아, 2021)

●
박인옥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I.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적인 생활 세계로 변모하며,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과 관계의 양상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정체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난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과 관계의 양상을 반세기 전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타자 지향적인 성찰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 연구소의 사회통합 총서 9권으로 독일로 이주한 10인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그녀들의 이주 경험을 초국가적 삶과 정체성 측면에서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과는 반대로 1960~1970년대 독일로 이주한 여성들의 경험을 들려준다. 당시 한국의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가난과 가부장적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독일의 정주 과정에서 주체적 개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경험한 그녀들은 일종의 정체성 협상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공간 변화가 가져오는 가치관의 변화와 주체성이라는 경험은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한인 여성들의 이주 생애담을 통해 문화 간의 충돌과 협상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열망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열망을 위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혼종적 정체성, 사회적 감수성, 가치와 이념, 초국적 연대 활동, 예술 행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문화적 재화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를 거듭 시도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졌던 여러 감정들을 떠올리며 그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다문화 사회의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이주자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책 내용 소개 및 특징

이 책은 재독 이주여성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생애담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생애담 연구는 자기성찰, 즉 자기인식에 대한 재구성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애담은 소외된 사회구성원의 관점에서 자기 역사를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기억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애담 연구방법에서는 생애담 인터뷰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생애담 인터뷰 방식이란 한 개인의 지나온 생애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총서의 연구자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여성의 생애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국과 독일에서의 면대면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외 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추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생애담 관련 질문은 독일로 이주하기 전의 삶, 이주 동기, 이주 초반의 적응 과정과 사회 활동, 이주 중반기의 모국 연계활동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이주 후반기의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등 초국적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연구참여자 10인의 이주 시점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이며, 거주 기간은 40년에서 50여년으로 상당히 길다. 이분들의 나이는 60대 후반부터 80대로 다양하며, 이주 경로는 간호사, 이민, 유학 등으로 연구참여자 3과 6을 제외하고 독일 국적이나 독일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연구참여자 10인에 대한 기본 정보는 연구개요에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 '독일 한인 이주와 여성'의 1절에서는 재독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한인 간호여성 이주의 역사 등을 통해서 '독일 한인 이주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 한

인 이주 역사는 1964년 이후 독일의 개발원조 참여로 이루어진 ‘기획이민’으로, ‘파독’으로 대변되는 한인 이주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자발적인 노동 집단의 이주로 당시 한국에서는 광부와 간호 인력을 독일로 파송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남아 독일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유럽 지역 내 최초의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된 이주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2절에서는 2000년 이후에 학술지에 게재된 독일 한인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독일 한인이주 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독일 한인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유형을 전반적 삶을 다룬 생애사적 연구, 간호 인력 노동자로서의 이주에 관한 연구, 여성 이주민의 페미니즘적 관점에 관한 연구, 이주의 정치·경제적 관점에 관한 연구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장 ‘초국적 이주 여성과 정체성’의 1절에서는 초국적 이주, 젠더와 정체성을 통해 초국적 이주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초국적 정체성으로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문장은 “이주 여성들에게 모국과 정주국은 모두 유령의 장소로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국의 집은 실재하진 않지만 정주국에서의 적응을 방해할 만큼 그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주국에서의 집은 실재하지만 진정성 있게 느껴질 만큼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Radhakrishnan, 1996)¹이다. 이는 이주여성이 초국가적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겪는 딜레마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유대 관계는 이주여성의 초국적 삶의 실천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한편 2절 ‘정체성과 문화’에서는 정체성의 의미와 다중성,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주와 여성, 그리고 초국적 정체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개별적 주체나 집단적 주체

¹ Radhakrishnan, R., *Diasporic meditations: Between home and loc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의 정체성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변화되는 사회적 구성주의 산물로 보며, 개인과 집단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만나므로 복수의 단위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정체성과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 영역, 속성, 자기 개념 요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정체성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정체성으로서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특정한 국가의 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체성의 변화는 문화변용과정과 밀접하여 이주민의 정체성 변화는 문화접촉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주여성들은 초국적 사회의 장에서 모국과 정주국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3장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생애담’에서는 총 10인의 연구참여자의 개별적인 생애담을 통해 이들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한다. 아울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일과 한국을 넘나드는 초국적 정체성을 살펴본다. 그녀들의 생애담을 통해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주체적인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긍정 에너지로 성공한 호텔 CEO인 연구참여자 1, 연대적 삶을 지향하는 열혈 시민운동가인 연구참여자 2, 순수한 동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동 문학가인 연구참여자 3, 무조건적 환대를 실천하는 양로원 원장인 연구참여자 4, 열정적인 페미니스트 한의사인 연구참여자 5, 한국으로의 귀환을 소망하는 화가인 연구참여자 6, 경계를 자유롭게 횡단하는 코스모폴리탄인 연구참여자 7, 독일에서 인정받은 엘리트 음악가인 연구참여자 8, 탈경계의 재일동포 출신 피아니스트인 연구참여자 9, 시나위 같은 삶과 음악의 작곡가인 연구참여자 10인 10명의 독일 한인이주여성들의 초국적 이주의 생애담을 통해 우리는 그녀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초국적 정체성의 주체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녀들의 생애담을 읽다 보면, 독일 한인이주여성들이 독일과 한국의 문화를 넘나드는 문화의 번역자들로 자신들의 모국인 한국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혼종적 정체성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장 ‘한국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에서는 10인의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전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결성과 관계성을 성찰해본다. 그녀들의 메시지는 개인과 사회,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복지와 교육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게 먼저 매너있게 대우해주어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체면을 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는 다문화정책에서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초국적 이주를 통한 새로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강조한다. 셋째, ‘문화와 예술’ 측면에서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많이 즐겨야 하며, 이에 한국의 많은 이주여성에게 문화예술적인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복지와 교육’ 측면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결속된 공동결합체와 유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의 복지 공간 마련의 필요성과 이주여성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모국역사 교육의 필요성,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 등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독일 한인이주여성이 전하는 메시지는 초국적 이주, 그 속에서 경험한 초국적 정체성을 통해 한국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III. 마무리

이 책에서 만난 독일 한인이주여성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만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능동적 실행이 이주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한인이주여성들은 ‘수동적 타자’가 아니라 이제는 독일의 시민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혼종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이주자들을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해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녀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재독 한인이주여성들의 생애담을 넘어 초국적 경험을 경험한 모든 이주자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이웃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을 향한 시선을 가다듬게 해주며, 우리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과 차별은 없었는지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과정 또한 독자들의 주체성 성장이며, 가치관 변화의 성숙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독일 한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 한 예로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경우 종종 ‘파독 간호사’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막대한 외화벌이로 기여한 바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는 동포군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었다. 가난한 시기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영웅들로 존중, 동정 그리고 배려의 존재들로 그려져 왔다. 이렇게 경제적이고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재독 한인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계로 단순 치환하기 어려운 심지어 물질적 자본 규모보다 큰 사회문화적 자산들의 이동과 교류에 끼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독일 한인이주여성들 중에는 간호사로 이주하지 않고, 유

학이나 이민과 같이 다양한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독일에 정착한 연구참여자 7~10과 같은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의 통계적 자료가 아닌 그리고 독일로 이주한 여성들을 상징하는 ‘애국자’ 또는 ‘희생자’라는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들의 개인적 삶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애담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개인의 생애에서 나타난 초국적 정체성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앞으로 다문화와 국제이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독일 한인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근 독일 한인이주여성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향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후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시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전반적 삶을 다루는 생애사 연구 기법 즉, 자료 수집 및 인터뷰 질문 구성, 인터뷰 내용의 분류 및 해석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을 통해 10인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그녀들이 품은 ‘열망’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연구자들이 그녀들의 열망으로 대변되는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연구 노력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을 다루는 이 책에서 그녀들의 이주 경험은 갖가지 어려움으로 쪼여 있지만, 영롱한 별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열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저자의 바람처럼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주여성 생애사 연구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이주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창간준비호

평화와 통일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7
홈페이지 www.uniedu.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평화와 통일

창간준비호

발간등록번호

11-1250557-000007-01

【특집기획】

-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 김연철 11
- 글로벌 미·중 경쟁의 향방과 한반도 · 조민 25

【평화·통일교육】

- 북한 이해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조정아 53
- 남북한 출신이 이웃으로 함께 살기 · 이향규 75
- 평화·통일교육의 갱신을 위한 다섯가지 테제 · 이동기 93

【이슈】

-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 이정철 121

【리뷰】

- 평화와 통일의 현장은 우리 곁에 있다 · 홍석률 133
- 독일 한인이주여성, 그녀들에게 열정을 배우다! · 박인옥 141